

EU Brief

| EU 동향 |

- 유로존 재정위기와 향후 과제
Eurozone's Fiscal Crisis and Issues ahead
- 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
ECB's Monetary Easing and EU's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nd the Advance of Extremist Party
- 우수한 인적자원과 FDI 유치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유럽 선진국
Enhancing Innovation through Human Capital and FDI
- 유럽 축구산업 현황과 글로벌화
Europe's Football Industry and its Globalisation Strategy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EU Focus 유로존 재정위기와 향후 과제 002 Eurozone's Fiscal Crisis and Issues ahead
	EU Economy 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 004 ECB's Monetary Easing and EU's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EU Politics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009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nd the Advance of Extremist Party
	Trade & Investment 우수한 인적자원과 FDI 유치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유럽 선진국 013 Enhancing Innovation through Human Capital and FDI
	Industry Trends 유럽 축구산업 현황과 글로벌화 017 Europe's Football Industry and its Globalisation Strategy
	EU Law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022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form in 2012
	Social Issues 유럽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 도제제도 026 Solution to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Europe: Apprenticeship
	Report Review EU 단일시장 20년의 성과 평가 033 The Single European Market 20 Years on Achievements, Unfulfilled Expectations and Further Potential
	EU Centre News 연세북극연구포럼 개최 035 Yonsei Arctic Forum
	온라인 원격 강의 035 Online Remote Lecture
	2013년 모의 유럽이사회 개최 036 Model European Council 2013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036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유로존 재정위기와 향후과제

Eurozone's Fiscal Crisis and Issues ahead

The fiscal crisis of the Eurozone appears to have subsided recently. There is certainly a marked contrast between now and a few years ago when the contagion from Greece in 2009 spread to Ireland, Portugal and Spain, engulfing the continent. This is attributed to the efforts of the following: support for the periphery countries, crisis containment measures, EU-level fiscal governance reforms, and the ECB acting as the lender of last resort. Adding to this is the growing market confidence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in the current accounts of periphery countries.

Nevertheles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iscal problems of periphery countries have been fully resolved. Policy responses that accommodate the different needs of the 17 Eurozone economies are not in place, much less effective and structured ones.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Eurozone's fiscal crisis other than the crisis itself: competitiveness issues, crisis of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European organisations, failing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nfidence issues following the years of excessive sovereign debt.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come up with measures on multiple fronts: 1) realisation of banking union 2) solutions for banking crisis 3) supportive measures for the countries facing severe fiscal difficulties.

Let us first look at the discussions around the banking union. In December 2012, the EU ministers agreed on the creation of a Single Supervisory Mechanism(SSM). A single authority -the ECB in this context- will be able to directly oversee the Eurozone banks and thus prevent the banking crisis of a member country from becoming a debt crisis. It has been agreed recently that over 6,000 banks will come under the remit of the ECB in early 2014. However, given differences in views between France and Germany,

and the reluctance of members such as Spain -whose weak financial institutions face the prospect of getting closed down- to readily take up the initiative, further compromises will have to be reached in the future.

The second issue that demands attention is the discussion around the solutions for banking crisis. The central components of the solutions are bank capitalisation and restructuring. By the time the SSM is implemented next year, effective new stress tests will be in place, the results of which will be used to generate appropriate measures. The issue at hand now is how the solutions will be carried out without upsetting the government finance, the financial market, and the real economy.

The third issue at hand revolves around the discussions for supportive policies for the economies in a fiscal morass. It is difficult to table a proposition for the additional provision of funds to countries like Greece and Portugal. This is because both core and periphery countries have grown weary of the restructuring process. Materialising additional support will require huge adjustment efforts by both parties.

It is clear that the Eurozone fiscal crisis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harmonise regulations and integrate supervisory mechanisms in finance sector. The task now is how Europe can take this forward, implementing steps together to realize the banking union. Let us hope that they overcome their differences and consolidate solidarit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on. ★

Yongdae Shin, a Chair Professor at Konkuk University

최근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표면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그리스에서 촉발된 재정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이탈리아로 번지며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확산되고, 급기야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논의되던 2년 전과는 확실히 대비된다. 이는 그동안 유로존을 중심으로 재정위기 국가에 대한 지원, 위기를 봉쇄하기 위한 대책, 유럽연합(EU) 차원의 재정 거버넌스의 개혁, 유럽중앙은행(ECB)의 최종대부자 역할 등의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다. 아울러 최근 재정수지 악화국가들의 경상수지도 개선되면서 시장안정화에 대한 믿음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들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17개국으로 확대된 유로존의 다양한 경제상황을 감안한 실효성있고 근본적인 정책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유로존 재정위기의 원인은 재정 문제뿐 아니라 대외 경쟁력 하락, 각국 정치 문제, 범유럽 기구의 위기, 금융기관의 취약성에 따른 위기 악화, 과다한 국가부채에 따른 신인도 저하 등 다양하다. 따라서 재정위기 회복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가운데 특히 ①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구체화, ② 은행위기 문제에 대한 대책, ③ 재정위기 상황이 심각한 국가에 대한 개별대책 등의 과제들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가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은행동맹 실현을 위한 논의를 살펴보면, EU는 2012년 12월 단일은행감독기구(Single Supervisory Mechanism)의 창설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은행동맹이 결성되면 단일기관에 유로존 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부실은행 처리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시행된다. 이를 통해서 은행위기가 해당국가의 부채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최근 EU 정상들은 ECB가 유로존 내 6,000여 개 모든 은행을 감독하는 단일은행감독기구를 2014년 중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가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스페인 등 금융기관의 부실 우려가 있는 상당수 EU 역내 국가들도 은행동맹의 빠른 도입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향후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둘째, 은행위기에 대한 대책 논의에서는 은행의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이 핵심이다. 2014년 하반기 은행동맹의 실현 등 은행감독의 일원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스트레스 테스트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재정과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은행자본 확충과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셋째, 재정위기 상황이 심각한 개별국가를 위한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다.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 국가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표면화하는 논의는 쉽지 않은데, 이는 재정위기 국가들이 장기간에 걸친 개혁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지원국 역시도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국가들과 독일을 비롯한 지원국 쌍방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고도의 조정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끝으로 유로존 재정위기는 EU가 금융 분야에서 규정의 조화와 감독기능의 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은행동맹의 실현과 같은 EU의 역내통합을 한 단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 간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유로존이 지난 5년간의 재정위기 과정을 경험삼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논의와 같이 EU가 붕괴되는 시나리오가 아닌, 역내통합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이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공동의 가치를 창출하면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신용대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석좌교수



ECB의 금융완화정책과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

ECB's Monetary Easing and EU's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The European Central Bank(ECB) overturned experts' forecast on November 7, 2013, by lowering the policy interest rate to 0.25%. This took place after just 6 months since the last decision to lower the rate from 0.75% to 0.5%. Now the policy rate stands at historically low level of 0.25%. With this measure, the Eurozone essentially introduced a zero interest-rate policy, joining the likes of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key factors that led the ECB to initiate rate cuts are the following: first, there has been concerns that the Eurozone could plunge into a deeper recession unless there is economic stimulus; second, most of the Eurozone countries have asked the ECB to step in and address the issue of strong Euro. However, despite the rate cut, the increased liquidity has not been used to supplement the real economy; the extra funding was instead deposited into central banks, or invested in real estate assets and emerging markets. This may incubate another financial bubble.

ECB의 정책금리 인하 단행

2013년 11월 7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정책금리를 0.25% 전격 인하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ECB가 0.75%에서 0.5%로 정책금리를 인정한 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이에 따라 ECB의 정책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인 0.25%로 인하되었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인해 유로존도 일본, 미국과 같이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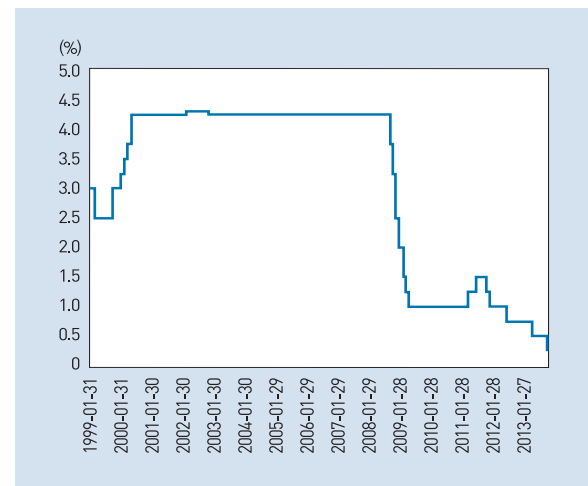
경기부양 필요성이 금리인하의 배경

ECB의 정책이사회의(11월 7일)가 개최되기 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ECB의 금리인하 시기를 11월 초가 아닌

12월 초로 예상하고 있었다. 블룸버그가 70명의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명 중 단지 3명만이 '11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ECB가 정책금리를 전격 인하한 배경은 무엇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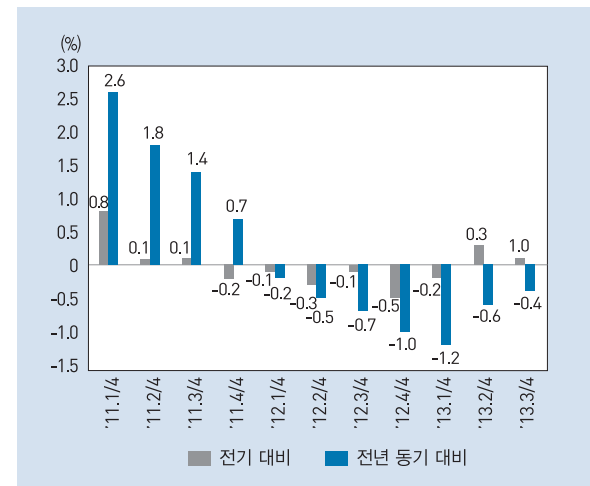
첫째, 서둘러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으면 유로존 경제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유로존 경기는 지난 2/4분기에 전기 대비 0.3% 성장해 점차 바닥을 탈출하고 있지만, 회복세가 미약해 추가 지원 없이는 지속 성장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11월 14일에 유럽통계청(Eurostat)이

★ ECB의 정책금리 추이



자료: ECB

★ 유로존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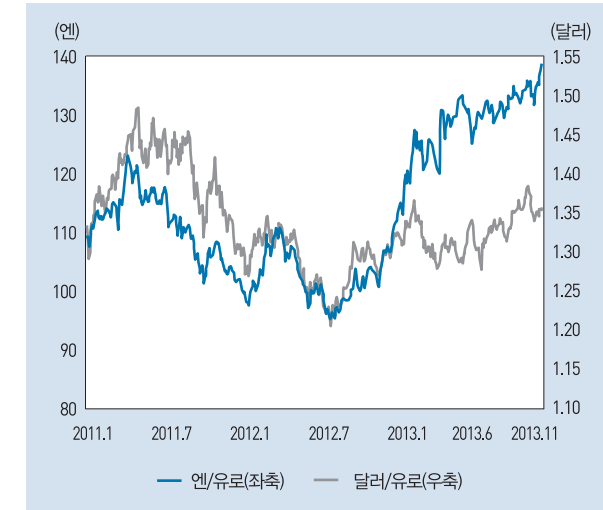
발표한 유로존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을 보면, 전기 대비 0.1% 성장(전년 동기 대비 -0.4% 성장)에 그쳐 유로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2013년 9월 유로존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2.2%를 기록하였다. 특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와 부채 증가로 고전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고용 악화와 신용경색으로 인해 경기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의 가파른 하락세도 ECB로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2013년 10월 현재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ECB의 정책목표인 2%를 크게 밑돌고 있다. 10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1.1%)보다 큰 폭으로 둔화된 것은 식품가격 상승률 둔화(9월: 2.6% → 10월: 1.9%)와 유로화 강세 및 수요 감소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하락세(9월: -0.9% → 10월: -1.7%)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소비 및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경기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어 ECB로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유로화 강세를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화는 주요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다. ECB가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11월 6일)의 유로화 환율을 살펴보면, 유로화 환율이 과도하게 치솟아 있어 금리인하를 통한 유로화 약세 유도가 불가피한 조치라고 여겨진다. 11월 6일의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1.35달러로, 지난 10월 30일에 기록했던 최고치(1.376달러)보다는 다소 하락했으나, 유로존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2년 7월 24일의 1.21달러에 비해서는 무려 11.8%나 상승했다. 또한 일본 엔화에 대한 유로화 강세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11월 6일의 엔화 대비 유로화 환율은 133.3엔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2년 7월 24일의 환율(94.6엔)에 비해 40.9%, 연초 환율(115.4엔)보다는 15.6%나 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로화 강세가 유로존의 본격적인 경기회복 등 내부요인보다 일본과 미국의 양적완화(QE)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유입 확대 등 외부요인

★ 달러 및 엔화 대비 유로화 환율



자료: Bloomberg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러다보니 프랑스, 이탈리아는 물론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유로화 강세 차단에 ECB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해왔다. 따라서 이번 금리인하 조치는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을 확대해야 하는 남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ECB가 들어준 셈이다.

ECB의 금리인하에 대한 상반된 시각

ECB의 이번 금리인하 조치에 대해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찬반양론으로 나뉜다. 우선, 비판론자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한두 가지 지표만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으로, 유로존의 3/4분기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지수 등을 비롯해 추가 지표들을 확인한 후에 금리를 인하해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독일연방은행의 옌스 바이트만 총재는 ECB의 금융완화정책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책이사회에서 금리인하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독일 정부도 제로금리정책이 예금자(자본 투자국)보다 차입자(자본 차입국)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며 금리인하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반면, 프랑스와 더불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이번 금리인하 결정이 경기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되었으나, 가파스로 바닥을 탈출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로존의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금물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ECB는 독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로 확산될 때까지 금융완화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금융시장의 분열(financial market fragmentation)’ 현상이다. ECB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유럽 국가들은 신용경색이 지속되어 시중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 힘입어 유로존의 본원통화(M1)가 7% 이상 증가했으나,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등에 따른 신용경색으로 총유동성(M3)의 증가율이 3%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독일은 국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상대적으로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자금경색이 여전히 ECB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ECB의 단일 금리정책(one-size-fits-all policy)으로는 경기 사이클이 상이한 유로존 회원국들을 모두 충족시킬 수 없어 남북 갈등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ECB의 추가 금융완화정책 시행 가능성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추계 전망보고서에서 2014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을 1.1%, 인플레이션율을 1.5%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투자은행(IB)들은 2014년에도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를 넘지 못하는 등 저(低)인플레이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 2014년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 임금 및 물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¹ 씨티은행과 도이체방크는 2014년 유로존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 JP모건은 0.9%로 전망

일각에서는 앞으로 유로존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비전통적 금융정책 수단인 양적완화를 포함해 추가 금융완화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스 캐피털은 2014년 초에 인플레이션율과 기대인플레이션율²이 추가 하락할 경우, ECB가 마이너스 예치금리(deposit rate)³나 3차 저금리 장기 은행대출(LTRO) 실시 또는 양적완화 등의 보다 과감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금리인하 등 금융완화정책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불구하고 풍부해진 자금을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경제에 사용하기보다 중앙은행에 예치하거나 부동산 혹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해 버블이 형성되는 등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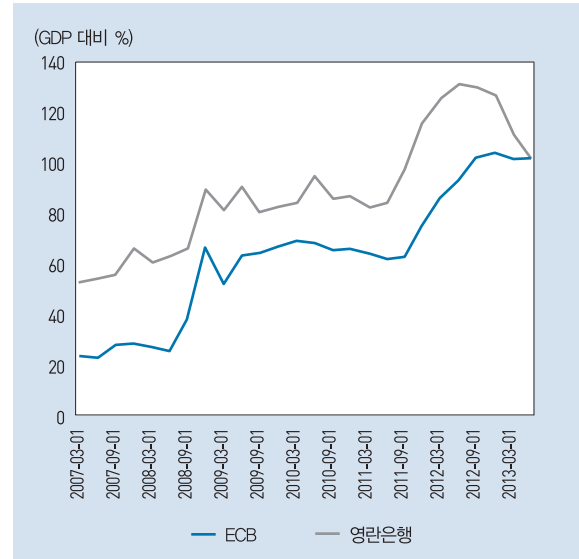
풍부한 유동성에 힘입어 해외투자가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CB는 국채 및 커버드본드 매입(2,880억 유로), 두 차례에 걸친 초저금리 장기 은행대출(LTRO, 약 1조 유로) 등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그 결과 ECB의 자산(대차대조표) 규모는 2012년 6월 말 한때 GDP 대비 131%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유로존은 민간 은행들의 LTRO 조기상환⁴과 ECB의 채권매각 등을 통해 꾸준히 유동성을 흡수함으로써 2013년 6월 말 현재 ECB의 자산 규모가 GDP 대비 101%로 감소한 상태다.

그동안의 풍부해진 유동성에 힘입어 EU 회원국들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약 1조 4,000억 유로 증가하였다.⁵ 유로존 국가 중에는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순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하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로존 국가들(전체 유입자금의 61.2% 차지)은 물론 영국, 스웨덴, 스위스 등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유럽 국가로부터

² 경제주체들이 예상하고 있는 미래의 인플레이션율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라고도 함
³ 민간은행이 잉여자금을 ECB에 단기간 예치할 경우 적용되는 금리
⁴ LTRO의 총 잔액은 2012년 4월 1조 900억 유로에서 2013년 8월 말 6,900억 유로로 감소
⁵ 유로존 국가들과 영국의 총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는 2007년 말 7조 유로에서 2013년 3월 말 8조 4,000억 유로로 약 20% 증가

★ ECB와 영란은행의 대차대조표 추이



자료: Bloomberg

투자자금을 유치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대행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미국, 유로존, 역외금융센터⁶, 일본, 노르웨이, 남아공,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 투자자금을 유치해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수행하는 세계 2위의 국제금융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가 대폭 증가

2012년 말 현재 유럽 13개 주요국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는 2조 8,060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최고치(2조 7,27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2008년 이래 지난 4년 동안 약 1조 달러가 증가한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영국(유럽 13개국의 투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과 룩셈부르크(20.8%), 스위스(10.9%), 독일(8.9%), 프랑스(8.6%)가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 분야를 살펴보면, 주식과 단기채권의 비중이 약 60% 차지하고 있어 투기성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유로존의 최대 투자국인 룩셈부르크의 경우,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에서

⁶ 싱가포르, 홍콩, 저지 섬(Jersey Island), 건지 섬(Guernsey Island) 등

★ 유럽 국가들의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룩셈부르크	492.9	264.9	398.2	525.6	470.0	584.4
독일	185.7	139.5	164.2	186.0	184.8	248.8
프랑스	330.5	230.0	252.8	248.4	220.9	240.7
네덜란드	129.8	94.4	121.5	142.8	140.1	178.7
이탈리아	128.4	85.8	91.4	287.2	86.0	84.6
오스트리아	62.1	45.3	52.1	51.6	45.4	51.5
스페인	161.9	142.5	55.9	45.4	38.0	87.3
벨기에	55.6	44.8	36.4	42.8	35.2	37.0
핀란드	24.5	16.8	23.8	28.8	24.7	32.6
유로존 9개국 합계	1,571.5	1,064.0	1,196.4	1,558.6	1,245.3	1,545.5
영국	789.5	444.8	559.7	773.3	710.1	814.9
스위스	282.0	237.8	242.7	235.4	271.9	306.6
노르웨이	50.6	41.7	59.0	75.6	71.1	102.6
스웨덴	33.5	22.4	29.0	30.4	32.1	36.4
유럽 13개국 합계	2,727.1	1,810.7	2,086.8	2,673.4	2,330.4	2,806.0

자료: IMF, Coordinated Portfolio Investment Survey(CPIS).

주식과 단기채권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51.3%에서 2007년 73.7%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56.3%로 다시 하락하였다. 영국과 룩셈부르크의 신흥국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향후 유로존 위기가 재연되거나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어 유럽 자금이 신흥국에서 이탈할 경우 주로 아시아와 중남미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07~2008년에 유럽계 자금이 아시아에서 대거 이탈한 바 있으며, 중남미는 2009년 이래 자금유입이 급증하여 자금이탈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⁷

유럽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는 정체

유럽 은행들의 신흥국 대출 및 증권매입(익스포저)⁸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가 연이어 터지면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였다. 유럽 은행들의 익스포저

⁷ 룩셈부르크는 아시아(신흥국 내 비중 25.1%)와 중남미(16.5%)에 대한 투자 규모가 가장 크고, 동유럽에 대한 투자 비중(8.3%)도 상대적으로 높음. 영국은 역외금융센터(신흥국 내 비중 31.5%)와 중남미(16.7%), 아시아(11.7%)의 순으로 투자 규모가 크고, MENA 지역에 대한 투자 비중(6.8%)도 상대적으로 높음
⁸ 은행과 기업 대출, 국채와 회사채 매입 등을 포함

2014년 유럽의회 선거와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

The 2014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and the Advance of Extremist Party

The 8th European Parliament election will be held on May, 2014. Since its first election in 1979, the election itself has faced increasing unpopularity from voters. After the turnout rate of 62% in 1979, the number has consistently fallen, setting historically low levels at every election. However, some have argued that the upcoming election, which is 6 months away, may be different. This is because: firstly, this election will be the first election to take place since the Eurozone crisis and thus presents an opportunity for the voters to question those responsible for the crisis and express their views on solutions; secondly, the EU integration has become a major issue for domestic politics since the crisis; and thirdly, the Treaty of Lisbon has enabled the outcome of the election to have greater impact on the political dynamics and the policy of the EU. In our view, the upcoming election will have higher turnout rate than the one in 2009. The center-right EPP will maintain its title of the largest party, and the anti-EU extremist parties on both sides of political spectrum will gain some ground.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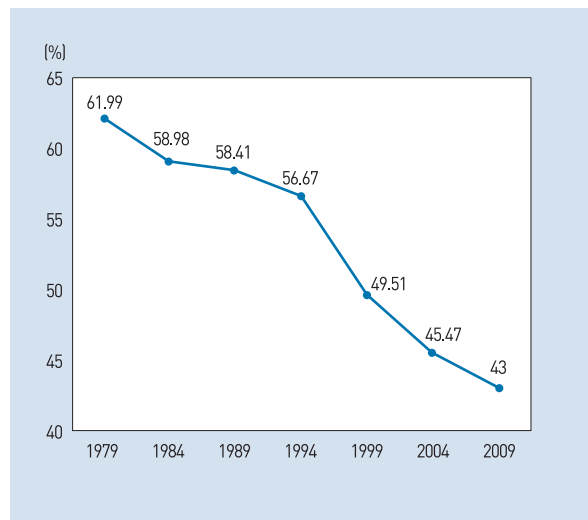
2014년 5월 8번째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유럽의회 선거는 1979년 처음 실시된 이래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1979년 61.99%의 투표율로 첫 선거가 치러졌으며,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선거 때마다 최저 투표율을 갱신해오고 있다. EU의 민주성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유럽의회 선거는 유럽의회의 민주적 정당성이 하락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6개월여 남은 현 시점에서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가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그리 주목을 끌 만한 중요성을 갖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향후 유럽통합의 향배에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를 분석하고,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기존의 선거와 다른 이유

2014년 유럽의회 선거가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와 다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번 유럽의회 선거는 기존의 정치·경제 제도에 대한 대중적 의구심이 유례없이 만연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된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로존 위기 발생 후, 긴축재정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해 각국 주요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정권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주류 정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반EU 통합이나 반이민을 표방하는 군소정당들이 약진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직 경기침체 해소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선거는 유로존 위기 발생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유럽의회 선거로서 유권자들이 EU 차원에서 유로존의 위기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해결책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첫 기회다.

★ 1979~2009년 유럽의회 선거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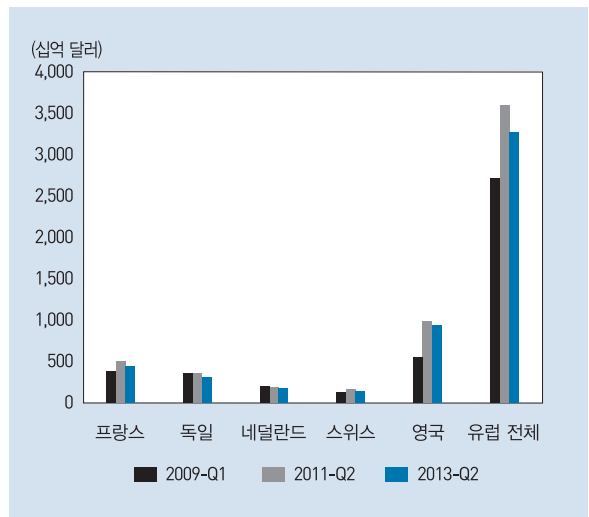


자료: European Parliament

규모는 2009년 이래 약 5,70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선진국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에서 유럽 은행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4분기에 76%에 달했으나, 이후 정체가 지속되어 2013년 2/4분기에는 66%까지 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은행들은 신흥국 대출 및 증권매입 등에 있어 여전히 최대 자금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는 2009년 1/4분기의 2조 7,000억 달러에서 2012년 2/4분기에 3조 6,000억 달러로 32% 증가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로 인한 신흥국 불안감 고조, 은행 자본 확충 및 구조조정에 대비한 자금 회수 등으로 2013년 2/4분기에 3조 2,70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 유럽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 변화



자료: BIS, International Banking Statistics.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해당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 규모가 크다. 영국 은행들은 신흥국 익스포저 규모를 9,000억 달러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독일 은행들은 동유럽 및 CIS 익스포저를 대폭 축소하여 신흥국 익스포저를 줄이고 있는 추세다. 한편, 프랑스 은행들은 2012년 후반부터 동유럽 및 CIS 익스포저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2013년 2/4분기

현재 유럽 은행들의 신흥국 익스포저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동유럽(36.7%), 아시아(28%), 중남미(23%), MENA(12.9%)의 순으로, 동유럽이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9년 이래 유럽 은행들의 아시아와 중남미에 대한 익스포저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 1/4분기~2013년 2/4분기에 아시아와 중남미가 전체 익스포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2%에서 28%, 21%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유럽 자본의 신흥국 투자 향방을 주시할 필요

2014년은 유로존 위기 해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유로존 위기의 해법으로 여겨지는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은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와 자본 확충, 그리고 은행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중차대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 변화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유로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흥국 리스크를 증폭시킬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에 나설 즈음에 은행동맹이 확실히 진전되지 않는다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에서 미국계 자금이 이탈하여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유럽 은행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해외자산 매각이나 자본 회수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는 미국 자본은 물론 위기에 처한 유럽 자본이 신흥국에서 이탈함으로써 신흥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시나리오다. 각국 정책당국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신흥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유로존 경제상황과 은행동맹의 추진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위기 악화 시 유로존이 자본이탈의 피해자인 동시에 신흥국 등 해외로부터 유럽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둘째, EU 제도적인 측면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로 인한 기대 효과가 달라졌다. 2009년 12월에 발효된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할 때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은 2014년 하반기 EU 집행위원장 임명 시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다. 1990년대 말에 제안된 유럽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장 임명 간의 연계 구축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부터 현실화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회의 4대 주요 정치그룹들은 유럽의회 선거와 EU 집행위원장 선택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럽의회 선거 운동에서 각각 EU 집행위원장 후보를 내세우고 범유럽적 정책 요강을 제시하기로 한 상황이다.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이사회가 EU 집행위원장 지명 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의회 선거에서 최대 의석수를 확보한 정치그룹이 내세운 EU 집행위원장 후보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견해다.

셋째,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EU의 자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될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와 다르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 1979년 첫 유럽의회 직접선거부터 지금까지 유럽의회 선거는 회원국의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소위 2순위 선거(second-order election)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2순위 선거는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 결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와 같은 1순위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낮고, 2순위 선거의 고유한 이슈(예: 유럽의회 선거의 경우 EU 정책, 지방선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가 아니라 1순위 선거 이슈(예: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 표출)에 좌우된다. 기존의 유럽의회 선거는 각 회원국의 국내 이슈를 중심으로 국가별로 치러졌다. 후보자 선정에서 선거운동에 이르기까지 각 회원국의 국내 정당이 중심이 되어 선거가 진행되는 데다, 유권자들이 EU 정치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유럽의회가 실제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EU의 정책과는 무관한 국내 정치 이슈가 선거를 주도했다.

그러나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지난 몇 년간 유로존 위기로 인해 유럽통합이 각국의 정치이슈로 부상한 데다 리스본 조약으로 유럽의회 선거 결과가 EU의 정치 동학이나 정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증가했기 때문에 EU의 고유한 의제가 선거의 중심 의제로 부상할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로존 위기 대처를 위한 긴축정책 실시, EU 차원의 재정위기 회원국 구제, 재정 및 금융 부문의 유럽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EU 시민은 지난 60년간 진행된 유럽통합의 결과를 실감하는 한편, 유럽통합의 장애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최근 치러진 각 회원국의 선거에서 EU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게 될 정도로 유로존의 위기는 각국 국내 정치를 유럽화(Europeanization)하였다. 또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 정치그룹이 각각 EU 집행위원장 후보와 EU 정책을 제시하게 되어 유권자들이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게 되었다.

유럽의회 선거 = 반EU 선거?

유럽의회 선거가 6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다만 피상적으로나마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의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09년 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높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중도 우파 정치그룹인 EPP가 최대 정치그룹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반EU를 표방하는 극단주의(극우·극좌) 정당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극단주의 정당들의 반EU 캠페인에 자극받은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하여 2014년 선거에서 투표율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즉, 1979년 이래 최초로 진정한 유럽통합 이슈로 진행되는 선거가 유럽통합에 대한 회의론 혹은 적극적 반대를 표방하는 장으로 변질되고, 결과적으로 반EU 정당들이 상당한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단주의 정당이 약진할 것이라는 우려는 유럽 정치에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호세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과

마틴 술츠 유럽의회 의장 등 주요 유럽 정치인들이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들 중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총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회의 20~25%가 반EU 의원들로 채워진다면 EU 입법과정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¹

그렇다면 레타 총리의 경고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가? 레타 총리의 경고가 현실화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2014년 선거에서 반EU를 표방하는 각국 극단주의 정당들이 총 2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반EU 정당들이 단일한 유럽의회 정치그룹을 구성하거나 상호 협력이 가능한 복수의 정치그룹을 구성하여 의회에서 의미 있는 세력화를 달성해야 한다. 셋째, 반EU 정치그룹이 실제 입법·재정 활동에서 단결된 표결 행태를 보일 만한 내부 응집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으면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단주의 정당의 약진이 EU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정당이 득세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각 정치그룹의 득표율은 중도 우파(EPP) 36%, 중도 좌파(S&D) 25%, 중도파(ALDE) 11.4%, 녹색 정당(Greens/EFA) 7.5%, 보수 및 유럽통합회의파(ECR) 7.3%, 극좌파(GUE/NGL) 4.8%, 통합반대파(EFD) 4.3%, 무소속(NI) 3.7%였다. 이들 정치그룹이 선거 직후 실제 확보한 의석은 다음과 같다.

유럽의회 내 통합 반대세력은 통합의 반대 정도에 따라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ECR과 GUE/NGL로 대표되는, 원칙적으로 EU를 수용하나 통합 중단이나 통합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통합회의론자들과 EU 해체를 포함한 통합의 역행을 주장하는 반EU 세력이 그것이다. 유럽통합 반대를 표방하는 각국 극단주의 정당들은 후자에 속한다. 이들은 대부분 유럽의회 내에서

★ 최근 20년간 유럽의회 정치그룹별 의석 수

정치그룹	유럽의회 임기			
	1994~1999년	1999~2004년	2004~2009년	2009~2014년
EPP(EPP-ED)	156	233	268	265
S&D(PES)	198	180	200	184
ALDE(ELDR)	44	50	88	84
GREENS/EFA(V)	23	48	42	55
ECR	—	—	—	54
GUE/NGL	28	42	41	35
EFD	—	—	—	32
UEN	—	30	27	—
IND/DEM	—	—	37	—
TDI	—	18	—	—
EDD	—	16	—	—
FE	27	—	—	—
RDE	26	—	—	—
ARE	19	—	—	—
EDN	19	—	—	—
무소속(NI)	27	9	29	27
총계	567	626	732	736

주: 선거 직후 기준, 굵은 글씨는 통합반대그룹
자료: European Parliament

정치그룹을 구성하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남아 있거나(프랑스의 국민전선, 네덜란드의 자유당, 벨기에의 플레미시 이익당 등), 혹은 영국의 영국독립당이나 이탈리아의 북부리그처럼 통합반대파 정치그룹(EFD)에 속해 있다. 따라서 레타 총리의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총 의석 수가 751석인 2014~2019년 유럽의회에서는 현재 EFD에 속하거나 무소속인 정당이 총 151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2009년 유럽의회 선거 직후 62석의 2.4배에 달하며, 현재 유럽의회 내 통합회의론자와 통합반대론자의 의석을 모두 합친 정도(총 148석, ECR+GUE/NGL+EFD+NI)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난 20년간의 유럽의회 선거에서 통합반대그룹(EFD,

¹ Yardley, J. (2013,10,15), Italian Prime Minister Calls Populism a Threat to Stability in Europe. *The New York Times*.

IND/DEM, EDD, EDN)의 의석 수를 볼 때, 이러한 급격한 증가는 그야말로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최근 발표된 한 연구²에 따르면, 2013년 현재 28개 EU 회원국 중 그 세력 면에서 유의미한 극우주의 정당에 있는 국가는 20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극우주의 정당에 있는 20개국 중,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3년 8월까지 치러진 총선에서 극우주의 정당이 선거에서 득표율을 늘리는 데 성공한 예는 절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일부 국가에서 반EU를 표방하는 극단주의 정당들이 약진한다 할지라도, 유럽의회 전체에서 반EU 성향의 유럽의회 의원이 20%에 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2009~2014년 유럽의회를 통해 유추해볼 때, 나머지 두 조건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먼저, 반EU 정당들이 단일한 유럽의회 정치그룹을 구성하거나 상호 협력이 가능한 복수의 정치그룹으로서 의회 내에서 의미 있는 세력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 유럽의회에 반EU 세력으로 EFD 그룹이 있지만 모든 반EU 정당이 이에 속한 것은 아니다. 무소속인 프랑스의 국민전선과 네덜란드의 자유당이 2014년 유럽의회 선거 후 극우 정치그룹을 만들겠다고 표방한 바 있으나 아직 범유럽적 정당 참여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EFD 그룹에 참가하는 대신 새로운 정치그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2014~2019년 유럽의회에서 통합반대세력의 단일화 가능성 또한 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반EU 세력이 실제 입법·재정 활동에서 단결된 표결 행태를 보일 만한 내부 응집력을 확보하기에는 통합반대라는 원칙론 이외에 공유하는 바가 적다. 현재 EFD는 내부 응집력이 약해 유럽회의의 표결에서 단결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파편화는 이념적 상이성 때문이다. 반EU 극단주의 정당은 좌우 이념 성향이나 선호하는 EU 회원국 권한의 배분 양상에 대해 입장이 다양하다. 정책 입장을 구체적으로 표명해야 하는 입법안에 당면하면

이러한 상이성을 극복하고 효과적으로 단일한 정책 입장을 내세울 만한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

EU 정치의 다면성과 극단주의

60년 통합 역사 동안 EU 차원에서 다루는 정책 영역은 방대해졌고, 정책의 복잡성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주류 정당들이 경기 침체와 통합 피로로 지친 유권자들에게 EU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만큼, 극단주의 정당들이 EU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EU 정치는 극단주의 정당의 통합 대 주권이란 논리가 대입되기에는 다면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는 최초로 유럽통합이 선거의 중심의제가 되는 진정한 의미의 유럽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며, EU 정치의 복잡성을 극복하는 것이 유권자와 정당 모두에 도전이 될 것이다. ★

전혜원 국립외교원 교수

우수한 인적자원과 FDI 유치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시키는 유럽 선진국

Enhancing Innovation through Human Capital and FDI

Most countries in the world seek to attract investment from multinational corporations(MNCs) in order to enhance innovation. The prerequisite for successful innovation through FDI is strong bases of human capital. This is because only countries with outstanding human resources will be able to absorb as much information and knowledge as possible from MNCs which in turn can be used to generate innovation. According to World Economic Forum'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European countries which are in the top ranks in the "innovation" category tend to be the most attractive FDI destination in terms of per capita. The report also ranked human infrastructure using 'local availability of specialised research and training service' and 'quality of the education system'; and the European countries have again come top in these categories.

글로벌 시대에 혁신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

혁신성 제고는 가치 있는 상품이나 지식 창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혁신 역량은 제조공정에 필요한 시간과 투입 자원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다른 국가나 기업들보다 경쟁력 있는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혁신성은 경제적 산출물인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켜 장기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다.

현재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EU 국가들로서는 혁신성 제고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특히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로존의 역내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단순히 임금 삭감이나 인력 감축에 치중하고 있는데, 혁신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FDI가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유럽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자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각종 세제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최상의 투자환경을 갖춘 국가로 인식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이러한 투자유치 노력의 배경에는 FDI 유치를 통해 혁신성을 제고하려는 국가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혁신성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¹ ①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 다국적기업은 높은 수준의 기

술력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업 활동은 자국 기업에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② 노동 이동효과(Labor turnover effect): 다국적기업은 현지 인력들을 채용하여 글로벌 수준의 교육이나 업무 능력을 전수하므로 현지 인재시장이 발달하게 된다. ③ 수직 통합효과(Vertical integration effect): 다국적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한 현지 부품 공급업체들은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갖춘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품질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 다국적기업들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발생하는 기술이전 효과(Spillover effect)는 부수적인 혜택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은 로컬기업과 경쟁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쟁은 양날의 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수한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로 무장한 다국적기업들과의 경쟁은 기술력이나 제품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지만, 치열한 경쟁은 자칫하면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연구개발 투자 감소 및 시장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² 이런 의미에서 경제학자인 조셉 슐페터는 혁신성 제고에 있어 경쟁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³

² Mudde, C. (2013,11.4.). A European shutdown: The 2014 European elections and the great recession. *The Washington post*.

¹ Blomstrom, M. & Kokko, A. (1998).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pillover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12(3), 247~277.

² Gilbert, R. (2006). Looking for Mr. Schumpeter: Where are we in the competition-innovation debate? *NBER Innovation Policy & the Economy*, 6(1), 159~215.

³ Bloom, N., Draca, M. & Reenen, J. V. (2011). Trade induced technical change? the impact of chinese imports on innovation, IT and productivity (Working Paper No.16717). NBER.



이처럼 학계에서나 산업계에서 FDI가 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따라서 FDI와 혁신성의 단순한 상관관계보다는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수한 인적자원이다.

FDI 효과 극대화에 현지 인적자원이 중요

유럽 30개국을 연구한 경영학자 무라드 다클리와 더크 클러크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란 다양한 형태의 지식이나 제품을 현지 시장에 적합하게 가공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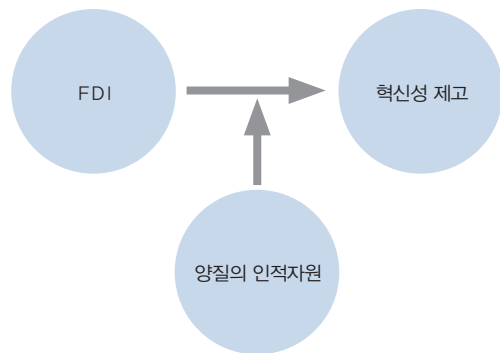
유사한 배경에서 경영학자인 존 캔트웰은 현지 기술 인프라의 필요충분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1955~1975년에 유럽 국가들은 미국으로부터 FDI를 많이 유치했는데, 전통적으로 강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나 산업만이 투자를 통한 혁신성 제고를 달성할 수 있었다.⁵

이처럼 인적자원이 혁신성 제고의 필수조건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혁신성의 특성에 있다. 혁신이라는 것은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서 외부에서 자동으로 이식해줄 수 없다.⁶ 따라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갖춘 투자유치국만이 다국적기업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여 혁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경제학자인 폴 로머는 지식이란, 비경합재 (non-rival goods)라고 표현했다. 지식이나 노하우는 논문, 콘퍼런스, 기업 간의 협업 등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런 비경합적 지식들을 다양한 형태로 발산하는데, 이러한 지식의 가치를 발견하고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창출은 오직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춘 국가나 기업들에만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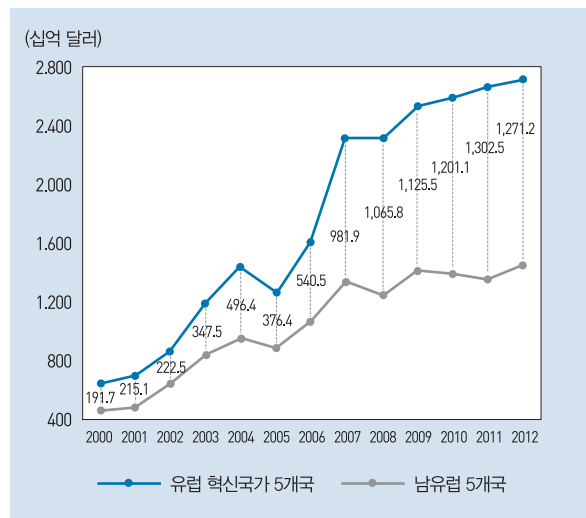
더불어 양질의 인적자원은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FDI 효과 극대화를 위한 양질의 인적자원



투자 목적에 따라 FDI는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가 자산추구형(Asset-seeking) 투자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이란 다국적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유형 자산을 일컫는데, 대표적으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나 특허된 과학기술 등을 들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만 의존하는 혁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외 우수 혁신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및 기술력과 융합이 필수다. 다국적기업들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연구개발 협업 등을 위해 유럽의 혁신국가들에 투자하고 있다.

★ 유럽 혁신국가와 남유럽의 FDI 유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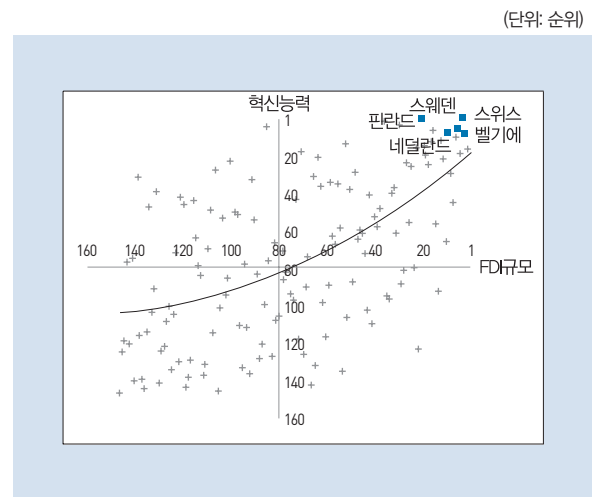
주: 1) 잔액(stock) 기준
2) 유럽 혁신국가 5개국(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남유럽 5개국(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자료: UNCTAD

유럽의 혁신국가 현황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측정하여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순위 결정 시 110개의 각기 다른 변수들을 활용하는데, 국가의 혁신성과 과학 기술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최근 발표된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에 따르면, 혁신성 분야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다. 또한 UNCTAD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FDI 유치 규모가 상위에 있는 국가들(2012년 1인당 기준) 역시 대체로 유럽 국가들이다.

이렇듯 학계에서 주장하는 FDI를 통한 혁신성 제고는 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벨기에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들이라 할 수 있다.

★ 글로벌 혁신 경쟁력 및 FDI 유치 국가 분포도



주: X축은 2012년 FDI 유치(1인당 기준) 규모 순위
Y축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의 혁신능력 순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3),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UNCTAD

한편,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인적자원과 관련된 순위도 제공하고 있다. 특허된 연구서비스 제공 능력과 교육시스템의 질적 순위에 있어서도 역시 상위권은 유럽 혁신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 인적자원 관련 상위 20위 국가들

순위	특화된 연구 및 교육 서비스 제공 능력	교육시스템의 질
1	스위스	스위스
2	독일	핀란드
3	네덜란드	싱가포르
4	오스트리아	카타르
5	벨기에	아일랜드
6	핀란드	바베이도스
7	홍콩	벨기에
8	스웨덴	몰타
9	미국	키프로스
10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11	영국	뉴질랜드
12	일본	네덜란드
13	노르웨이	레바논
14	싱가포르	독일
15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16	대만	아이슬란드
17	카타르	스웨덴
18	캐나다	노르웨이
19	아랍에미리트	말레이시아
20	말레이시아	코스타리카

주: 굵은 글씨는 유럽 국가들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3),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3~2014.

스웨덴과 스위스 등을 비롯한 유럽의 혁신국가들에게 우수한 인적인프라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정보와 지식을 최대한 흡수하여 혁신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IBM(美), 제넨텍(美), 바라트 포지(印), BMW(獨) 등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정보통신, 생명공학, 자동차 및 차량 안전시스템 등 스웨덴의 다양한 분야에 적극 투자함으로써 혁신형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스톡홀름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키스타 과학도시(Kista Science City)’는 실리콘밸리에 이어 세계 2위의 IT 및 멀티미디어 클러스터로, 현재 약 700개 사의 입주기업 중 40% 이상이 외국계 기업이다.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는 스웨덴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있다.



유럽 축구산업 현황과 글로벌화

Europe's Football Industry and its Globalisation Strategy

With the prolonged European fiscal crisis, consumers have shunned luxury goods and firms have been trying to reduce the cost of marketing. However, the expenditure on football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The revenue of the European football industry in 2012 recorded an year-on-year growth of 11%, totalling 19.4 billion Euros. Even countries such as Spain and Italy that had suffered heavily from the crisis, experienced the revenue growths of league 1 football, recording 3% and 1% respectively. This can be partly explained by investment from abroad. With the European football leagues becoming a global phenomenon, investors from the Middle East are increasingly using Europe's football industry as means to promote their brand globally as well as to boost their earnings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ir team'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companies from South East Asia are investing so they can use European football's brand power in their domestic market.

유럽 축구산업을 이끄는 영국 프리미어리그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유럽 소비자들이 럭셔리 제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축구에 대한 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재정위기로 허덕이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도 1부 축구리그의 2011~2012년 매출이 각각 3%와 1% 증가하는 등 여타 산업과는 달리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였다.

유럽 축구산업의 매출은 2011~2012년에 전년 대비 11% 증가하며 194억 유로를 기록했다. 리그별 매출은 영국 '프리미어리그'가 29억 유로로 가장 컸고, 유로화

기준으로 무려 16%나 증가했다. 독일 '분데스리가'(19억 유로), 스페인 '라 리가'(18억 유로), 이탈리아 '세리에 아'(16억 유로), 프랑스 '리그 1'(11억 유로)이 뒤를 이으며 5대 축구 리그가 유럽 전체 축구산업 매출의 48%를 차지했다. 한 경기당 관람자 수는 분데스리가가 4만 4,293명으로 1위였으며, 프리미어리그가 3만 4,646명으로 2위, 라 리가가 2만 6,050명으로 3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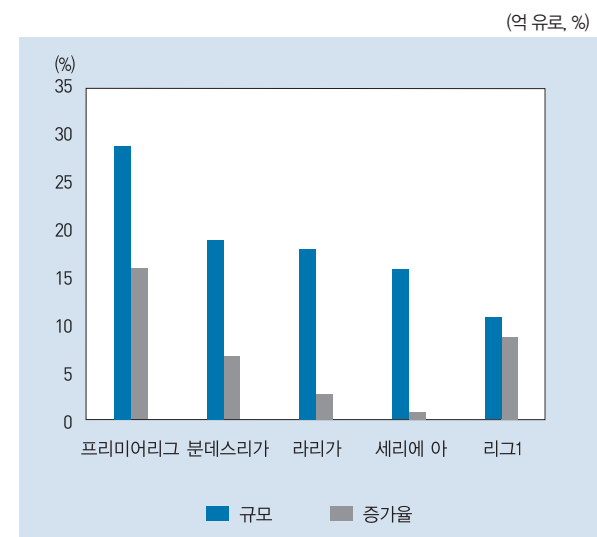
유럽 축구계의 투톱: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유럽 최대 규모의 축구 리그는 영국이 보유하고 있으나 개별 구단의 매출은 스페인 구단이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 기준 상위 20위에 영국 구단이 7개, 이탈리아 구단이 5개, 독일 구단이 4개, 스페인 구단이 2개, 프랑스 구단이 2개 포함되어 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03~2004년에 당시 8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부터 선두를 탈환한 이후 2011~2012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11~2012년에 레알 마드리드가 스포츠 구단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다양한 구단과 친선경기를 하며 중계권 매출이 9% 증가하였고, 광고 매출이 9% 증가했다. 그 결과 총 매출이 7% 증가하였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갱신한 기록은 이것만이 아니다.¹ 2013년 전 세계 축구구단 기업가치 순위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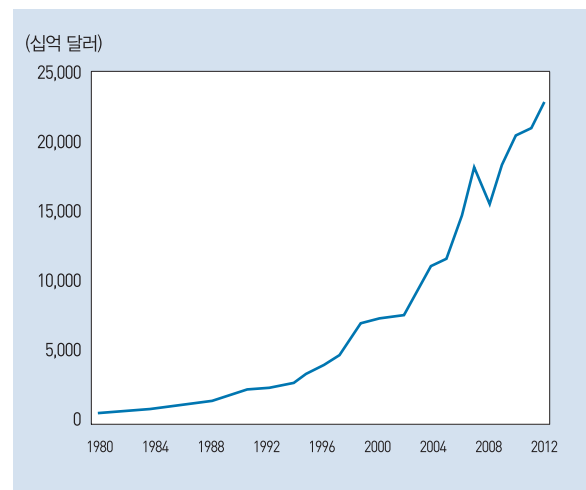
¹ 2011~2012년에 레알 마드리드는 라 리가 시즌 최고 승점(100점), 최다 승리(32경기), 최다 득점(121골)을 기록. 2012~2013년에는 FC 바르셀로나가 승점 100점, 32경기 승리로 1위를 탈환. 득점은 115골을 기록.

★ 2011~2012년 유럽 축구리그 매출과 증가율



주: 프리미어리그의 매출 증가율은 유로 기준이며, 영국 파운드 기준으로는 4% 증가
자료: Deloitte (2013). Turn on, tune in, turnover: Annual Review of Football Finance-Highlights.

★ 1980~2012년 글로벌 FDI 유입 추이



주: 잔액(stock) 기준
자료: UNCTAD

위함이지, 단순히 앞선 기술과 정보를 전수해 주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이다.⁸

사실, 한국의 인적자원은 글로벌 수준과의 격차가 크지 않다.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국가별 수학과 과학 교육의 질적 순위도 제공하고 있는데, 한국은 유럽 혁신국가들과 더불어 상위 20위권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 단위의 인적자원 수준을 측정할 때 자주 활용되는 연구개발(R&D) 투자비용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다.⁹ 이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의 기업과 경제는 다국적기업들이 발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 가치를 발견하고 혁신으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유럽의 혁신 국가들과 다르게 FDI 유치 규모는 초라하다.¹⁰ 따라서 창의성과 기술 혁신이 핵심인 창조경제의 실현 수단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FDI 유치 및 홍보 활동일 것이다. ★

주대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⁸ Gorg, H. & Greenaway, D. (2004). Much ado about nothing? Do domestic firms really benefit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9(2), 171-197.

⁹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 핀란드, 한국 순(2010년 기준)

¹⁰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FDI 유치 규모는 전체 144개국 중 64위(2012년 1인당 기준)

스위스 역시 화학, 제약, 정밀기계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 초부터 바이오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분야의 인적 역량을 강화해왔다. 이와 함께 스위스의 연방정부와州政府들은 다국적 생명공학 및 바이오 업체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로세, 노바티스, 세로노 등 로컬 제약회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을 이뤄냈다. 이처럼 FDI를 통한 혁신성 제고 효과는 여건을 갖춘 국가에서만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춰야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유럽의 재정위기국들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혁신 경쟁력이나 인적자원 측면에서 남유럽 국가들은 북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신흥강국들보다 열세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자국 기업의 혁신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크게 활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전 세계 FDI는 해마다 늘고 있다.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2000~2012년 사이, 세계 FDI 유입액은 연평균 9.7%로 증가했다. 투자의 주역은 미국과 북유럽을 포함한 선진국들이다.⁷

한국의 강점 분야라 할 수 있는 제조업이나 IT 분야에서 투자 관련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다국적 기업들의 한국 투자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다국적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혁신성 제고와 이에 따른 이익극대화라는 성과를 거두려면 우수한 인재 양성 및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국적기업들이 해외투자를 하는 이유는 본국에 없는 특별한 자산이나 자원을 얻기

⁷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최대 해외투자(Top 10 countries for outward FDI stocks)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홍콩, 스위스,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순



★ 2011~2012년 유럽 축구 구단 매출액

(단위: 백만 유로)

순위	매출		구단명	국적
	2012년	2011년		
1	1	512.6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2	2	483.0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3	3	395.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4	4	368.4	바이에른 뮌헨	독일
5	5	322.6	첼시	영국
6	6	290.3	아스널	영국
7	12	285.6	맨체스터 시티	영국
8	7	256.9	AC 밀란	이탈리아
9	9	233.2	리버풀	영국
10	13	195.4	유벤투스	이탈리아
11	16	189.1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12	8	185.9	인터 밀란	이탈리아
13	11	178.2	토트넘 핫스퍼	영국
14	10	174.5	샬케 04	독일
15	20	148.4	나폴리	이탈리아
16	14	135.7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	프랑스
17	17	131.9	올림피크 리옹	프랑스
18	18	121.1	함부르크 SV	독일
19	15	115.9	AS 로마	이탈리아
20	-	115.3	뉴캐슬 유나이티드	영국

자료: Deloitte (2013), Captains of industry: Football Money League.

포브스가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기업가치는 미래 수익 창출능력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것인데, 레알 마드리드의 1위 등극은 최근 승승장구하면서 스폰서십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아디다스와 세계 최대 규모의 유니폼 등 용품 계약을 맺어 연 3,800만 유로를 확보했다.²

레알 마드리드의 숙적인 FC 바르셀로나의 매출은 7% 증가하며 4년 연속 2위를 기록했다. FC 바르셀로나는 2010~2011년에 UEFA(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했으나 2011~2012년에는 준결승에서 패배하며 중계권 매출이 줄어들었다. 한편, 2011~2012년부터

² Real Madrid and Barca earn most from kit deals, United and Liverpool closing in. (2012.10.8.), *Sportingintelligence*.

★ 2013년 유럽 축구 구단 기업가치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가치		구단명	국적
	2013년	2012년		
1	2	3,300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2	1	3,165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3	3	2,600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4	4	1,326	아스널	영국
5	5	1,309	바이에른 뮌헨	독일
6	6	945	AC 밀란	이탈리아
7	7	901	첼시	영국
8	9	694	유벤투스	이탈리아
9	13	689	맨체스터 시티	영국
10	8	651	리버풀	영국
11	11	520	토트넘 핫스퍼	영국
12	10	498	샬케 04	독일
13	14	456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독일
14	12	401	인터 밀란	이탈리아
15	15	368	올림피크 리옹	프랑스
16	-	358	코리티안스 파울리스타	브라질
17	20	330	나폴리	이탈리아
18	16	300	함부르크 SV	독일
19	18	285	올림피크 드 마르세유	프랑스
20	-	263	뉴캐슬 유나이티드	영국

자료: The world's most valuable soccer teams. (2013.4.17.), *Forbes*.

카타르 스포츠 인베스트먼트가 스폰서십을 시작하며 광고 매출이 무려 20%나 증가하였다. 스폰서십 규모는 5년간 1억 5,000만 유로로 알려졌다. 이에 힘입어 2013년 FC 바르셀로나의 기업가치가 전년 대비 무려 99%나 증가하며 2위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갔다.

유럽 축구산업으로 몰려드는 중동자본

매출 및 기업가치 순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단은 단연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다. 맨체스터 시티는 매출 순위가 2010~2011년 12위에서 2011~2012년 7위로, 기업가치 순위가 2012년 13위에서 2013년 9위로 쉼터점프를 하였다.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순위는 2008~2009년에 10위에서 2년 동안 5위, 3위로 치솟았고, 2011~2012년에는 프리미어리그를 재패하였다.

맨체스터 시티가 갑자기 두각을 나타낸 배경에는 중동의 강호 아부다비의 금전 지원이 있었다. 중동 부호들의 유럽 축구산업 투자 목적은 자국 국가 및 기업 브랜드의 글로벌화를 위한 마케팅과 구단 성적 향상을 통한 수익 확보다. 2008년 아부다비의 왕족인 셰이크 만수르가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이후 세계 최고 선수를 확보하는 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왔다. 278개 주요 스포츠 구단의 1군 연봉 순위에서 맨체스터 시티는 2010년 86위에서 2011년 10위, 2012년 3위로 수직상승했고, 2013년에는 연봉이 가장 높은 구단이 되었다. 선수별로는 야야 투레가 1,800만 달러로 전 세계 축구선수들 중 3위, 카를로스 테베즈와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각각 1,700만 달러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³

★ 2013년 유럽 축구구단 1군 평균 연봉

(단위: 만 달러)

순위	연봉		구단명	국적
	2013년	2012년		
1	3	806	맨체스터 시티	영국
2	2	726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3	1	721	FC 바르셀로나	스페인
4	5	654	AC 밀란	이탈리아
5	4	624	첼시	영국
6	6	615	바이에른 뮌헨	독일
7	7	615	인터 밀란	이탈리아
8	8	60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9	9	564	아스널	영국
10	10	516	리버풀	영국

자료: Manchester City rise to top of global pay charts, Dodgers soar to challenge. (2013.6.11.), *Sportingintelligence*.

대규모 투자와 함께 2011~2012년 매출도 무려 51% 증가하였다.⁴ 2011~2012년에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하고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서

³ 2012~2013년 기준 1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레알 마드리드) 2,300만 달러, 2위 리오넬 메시(FC 바르셀로나) 2,000만 달러, 공동 3위 웨인 루니(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800만 달러, 공동 5위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파리 생제르맹), 페르난도 토레스(첼시) 1,700만 달러, 9위 디디에 드록바(갈라타사라이) 1,600만 달러, 10위 카카(AC 밀란) 1,400만 달러. 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 광고 및 스폰서십 계약 금액은 제외(World's highest paid athletes. (2013.6.5.), *Forbes*.)

⁴ 유로화 기준으로는 68% 증가

중계권 매출이 28%, 관람권 매출이 16%나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매출 증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은 광고다. 아부다비의 국영 에티하드항공과 10년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2012년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총 계약 규모는 4억 파운드로 추정되는데, 아스널이 황금기였던 2004년에 에미레이트 항공과 15년간 9,000만 파운드에 스폰서십 계약을 한 것과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규모다.⁵ 구단주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의 부총리이며 칼리파 대통령의 이복형제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에티하드항공과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자금을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계약을 통해 맨체스터 시티는 다소 비정상적인 매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매출은 중계권 50%, 광고 27%, 관람권 23%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는 광고가 49%를 차지하였다.

비슷한 현상이 프랑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카타르 투자청이 파리 생제르맹의 지분 70%를 매입하고, 2012년에 나머지 지분 30%를 매입하며 프랑스 축구리그의 큰 손으로 부상하였다. 파리 생제르맹은 자본력을 앞세워 초특급 선수들을 영입하였고, 프랑스 리그 1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009~2010년 13위를 기록한 이후 2010~2011년 4위, 2011~2012년 2위로 급상승하였다. 2012년에는 유벤투스, 인터밀란, 바르셀로나, AC 밀란 등 명문구단 출신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를 영입하였다. 스트라이커인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는 곧 바로 2012~2013년에 30골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득점자가 되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으로 이끌었다. 2013년에 파리 생제르맹은 카타르 관광청과 파트너십을 맺으며 향후 4년간 총 2억 유로의 매출을 확보하였다. 머지 않아 파리 생제르맹이 매출 상위 20위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라 리가에도 중동 투자가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 2010년 12월 바르셀로나가 카타르 투자청과 교육 및 과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인 카타르 재단 로고를 유니폼에 다는 조건으로 연 3,000만 유로 규모의

⁵ Soccer's new goal: Kick the spending habit. (2012.8.12.), *Reuters*.





계약을 체결하였다. FC 바르셀로나는 1889년 이후 111년 동안 유니폼 스폰서를 받지 않는 전통을 갖고 있었으나 축구구단들과의 경쟁에 불이 붙으며 이를 포기하였다.⁶ 이어 2013년 3월에는 카타르항공과 3년간 연평균 3,200만 유로 규모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2013년 여름부터 FC 바르셀로나 유니폼 앞면에 새겨져 있던 카타르 재단 로고가 카타르항공 로고로 바뀌었고, 바르셀로나는 113년 만에 처음으로 유니폼에 민간 상업 기업의 로고를 내걸게 되었다. 2013년 5월 레알 마드리드는 두바이의 에미레이트항공과 연 3,000만 유로 규모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레알 마드리드는 2014~2015년부터 5년 동안 'Fly Emirates'라는 문구가 달린 유니폼을 입게 된다.

서에서 동으로 유럽 축구산업의 축 이동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기업들도 유럽 축구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중동 투자자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내수시장 규모가 작은 중동 국가들과는 다르게 동남아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인구 대국들이 위치해 있고, 더욱 크게는 6억 명의 아세안 시장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유럽 축구를 사랑하는 동남아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동남아에서 유럽 축구에 대한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 유럽의 최대 축구리그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2013~2015년 해외 중계권 계약 규모는 2010~2013년 대비 55.4% 증가해 22억 3,00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 중계권 계약 규모는 77.2% 증가해 9억 4,000만 파운드를 기록했다. 해외 중계권 계약 규모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2013년 36.9%에서 2013~2016년 42.1%로 증가했다. 특히 동남아 방송국들이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계약 규모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태국이 1위, 싱가포르가 2위, 말레이시아가 4위, 인도네시아가 6위를 기록하며 동남아가 해외 중계권 계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9%에 달했다. 중국과 인도가 아시아 상위 10대 국가에

⁶ 2006년에 바르셀로나는 유니세프에 연 150만 유로를 지원하는 계약으로 사상 처음으로 유니폼에 로고를 달았음. 2010년부터는 카타르 재단의 로고를 유니폼 앞면, 유니세프의 로고를 뒷면에 달았음

★ 2013~2016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해외 중계권 계약

국가 및 지역	계약 규모		비중(%)	계약 기관
	백만 파운드	백만 유로		
전 세계	2,233	2,592	100	-
아시아	941	1,101	42.1	-
태국(+라오스, 캄보디아)	205	240	9.2	CTH
싱가포르	190	222	8.5	Singtel
홍콩	128	150	5.7	Now TV
말레이시아	128	150	5.7	Astro Measat
인도(+서남아)	93	109	4.2	Star Sports
인도네시아	51	60	2.3	First Media
중국(+마카오)	32	37	1.4	BesTV/SSMG
한국	26	30	1.1	SBS ESPN
미얀마	26	30	1.1	SkyNet
일본	24	29	1.0	J Sports
베트남	22	26	0.7	VTVCab
유럽(영국 제외)	607	690	27.2	-
프랑스	158	180	7.1	Canal+
노르딕 4국	158	180	7.1	Medge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5	240	9.2	-
중동 및 북아프리카	205	240	9.2	-
북미 및 카리브 해	179	210	8.0	-
미국	165	188	7.4	NBC
중남미	96	112	4.3	-

자료: Asia driving boom as Premier League foreign TV cash hits £2.23bn. (2013.9.9.). *SportingIntelligence*.

포함되어 있으나 각각의 인구가 13억과 12억 명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계약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동남아 기업들도 유럽 축구의 인기를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인도네시아의 가루다(항공), 멀티스트라다(타이어), 엑스트라 조스(에너지 드링크), 텔콤셀(텔레콤), 인도사트(텔레콤)는 각각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아스널, 바르셀로나와, 베트남의 비에틴뱅크(금융)와 베트남투자개발은행(금융)은 각각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다. 미얀마 기업도 유럽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⁷ 2012년 그랜드 로열(음료

⁷ Southeast Asian companies hope to score big in soccer deals. (2013.6.7.). *Wall Street Journal*.

및 술)은 첼시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 스폰서 기업들은 자국 및 아시아 지역 광고와 제품 라벨에 구단 엠블럼과 선수 사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유럽 축구를 동남아 시장 공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한 기업은 말레이시아 항공사 에어아시아다. 에어아시아는 아시아에서만 운항하는 항공사로, 2011년에 에어아시아 CEO인 토니 페르난데스가 퀸스파크 레이저스⁸의 지분 66%를 인수하였고, 에어아시아는 유니폼 스폰서가 되었다. 한편, 2013년 10월 인도네시아 재벌 에릭 토히르가 이탈리아 명문 인터 밀란의 지분 70%를 인수하면서 판이 커졌다. 에릭 토히르는 인도네시아의 거대 미디어 기업인 마하카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 부친은 인도네시아 중추기업인 자동차 제조 및 유통업체 아스트라 인터내셔널의 공동 창립자이며, 친형은 아다로 에너지, 수랴 에사 페르카사 등 주요 에너지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에릭 토히르는 지분매입 과정에서 인터 밀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같이 아시아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 에릭 토히르와 그 일가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 마케팅 활동에 인터 밀란 브랜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유럽 축구구단들도 동남아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2013~2014년 시즌을 앞두고 아스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와 바르셀로나는 동남아에서 경기를 가졌다. 열악한 경기장 시설, 높은 습도, 시차 등으로 인해 선수들의 컨디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단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 팬들을 찾아간 것이다.

유럽 축구산업의 당면과제: 재정균형

2013년에도 유럽 축구산업의 매출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비스카이비와 BT 그룹이 프리미어리그와 맺은 중계권 계약의 규모는 무려 30억 파운드에 이른다. 이는 2013~2014년 시즌부터 3년간 매년 10억 파운드에 달하는 규모이며, 지난 3년간 계약 대비 71% 증가한 수준이다. 인터넷 및 해외 판매를 포함하면 향후

⁸ 퀸스파크 레이저스는 2011~2012년에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승격되었으나 2013~2014년에 2부 리그로 강등

3년간 중계권 관련 매출이 50억 파운드를 쉽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⁹

한편, 유럽 축구산업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신흥국 부호들이 선수 영입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한 결과 이적료와 연봉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1~2012년의 경우 이탈리아 세리에 아와 프랑스 리그 1의 매출에서 연봉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75%와 74%에 달했다. 이로 인해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구단들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UEFA 대항전에 참가하는 237개 구단의 손익 합계가 2008년 6억 4,000만 유로 적자에서 2011년 16억 7,000만 유로 적자로 확대되었다.¹⁰ 2011~2012년에 영업 이익을 달성한 유럽의 5대 축구 리그는 분데스리가와 프리미어리그 2개에 불과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EFA는 재정규제제도(Financial Fair Play)를 2011~2012년에 도입했고, 2013~2014년부터 완전 시행하였다. UEFA는 적자가 기준치 이상을 넘어서 구단에 유럽 대항전 출전 불허, 상금 유예 등 제재를 가하고, 구단 소유자와 관련 기업이 과도한 액수의 스폰서를 하는 편법에 대해 감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당분간 이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의 주요 구단들과 UEFA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축구를 신흥국 마케팅에 활용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유럽 축구의 인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업들도 동남아 등 신흥지역 공략을 위해 유럽 축구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진출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스탠다드차타드(금융)와 유니레버(생활용품)는 최근 각각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폰서십을 체결하거나 연장하였다. 두 기업은 축구를 지역 마케팅에 활용하는 동시에 CSR 활동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기업들도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신흥국 마케팅에서도 유럽 축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⁹ Premier League lands £3bn TV rights bonanza from Sky and BT. (2012.6.13.). *The Guardian*.

¹⁰ UEFA (2013). Licensed to thrill: Benchmarking report on the clubs qualified and licensed to compete in the UEFA competition season 2013/14.





EU 개인정보보호 규제 동향: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중심으로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Reform in 2012

On January 25th 2012, the European Commission proposed a comprehensive reform of the EU's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s to strengthen online privacy rights and boost Europe's digital economy. This amendmen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one in several aspects: 1) it takes the form of 'regulations' rather than 'directives'; 2) it adopts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ch is a right to demand deletion of data no longer needed for the purpose for which it was collected; 3) it strengthens data protection authorities of each member country, and makes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a sole coordinator of EU-wide enforcement; and 4) it imposes tough sanctions in case of violation. In light of the recent revelation on the NSA's unlawful data collection, the EU is looking to tighten privacy laws, with this amendment as the first step. Because the EU strictly prohibits the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countries, the amendment will have a direct impact on the Korean firms in the EU. The amendment is also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s a blueprint for the future of Korea's privacy laws.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

안전행정부가 최근에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 개인정보주체의 법에 대한 인지도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도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EU가 제반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증대 및 이를 위한 규제 강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한국은 정서적인 친밀감 때문인지 미국보다는 EU의 규제동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동조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향후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의 방향성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EU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처리동향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 내용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25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¹을 발의

하였다. 이 개정안은 1995년 제정된 정보보호지침의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새롭게 수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 발의 이후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9일 유럽의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2013년 10월 21일 관련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시민자유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현재 본회의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EU가 새롭게 발의한 2012년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을 대체하는 것으로 ① 법 형식에 있어서 '지침(Directive)'이 아니라 '규칙(Regulation)'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 ②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 ③ 개별 회원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단일한 유럽정보보호위원회(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 ④ 위반 시에 강력한 제재규정(최고 100만 유로 또는 회사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2%)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²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대 개인정보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정안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보주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도 목적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규범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는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디지털 정보뿐만 아니라 수기로 작성한 정보도 포함한다. 지역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EU 내에서 관리자 또는 사업자가 사업활동 중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보처리활동이 EU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EU 영역 밖에 있는 관리자가 EU 내에 거주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어야 하며,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존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2012년의 개정안에서는 1995년 정보보호지침에 비해 정보처리에 있어서의 투명성 원칙과 정보 수집의 최소화 원칙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개인정보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 절차가 있음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관리자는 정보 수집의 주제, 목적 등 일정한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는 정보 수집과 관련된 통지를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 자신에 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2012년 개정안에서 새로 도입된 권리에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있다. 이것은 정보주체가

관리자에게 ① 수집 또는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한 보관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한 경우, ④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른 이유로 당해 규칙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추가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리에 따르면, 관리자가 이미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하여 정보를 처리하는 제3자에게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에 대한 링크나 복사 또는 복제 일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 '정보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전자 도구로 처리되는 경우 이용이 허용되는 정보를 정보주체가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처리에 동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자를 거치지 않고 전자 형태로 다른 곳으로 전송할 권리가 있다. 한편,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다만,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에 우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U 역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만 정보 이전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 없이는 개인정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라 EU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관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된다. 관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불복하는 정보주체는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¹ European Commission (2012.1.25.). Commission proposes a comprehensive reform of data protection rules to increase users' control of their data and to cut costs for businesses.

² 함인선 (2012). "EU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안'을 중심으로 하여." 『저스티스』, 133호.





이와는 별도로 공익단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사법 절차를 통해 감독기관이 관리자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관리자의 정보처리 자체에 대해 권리 침해 회복을 위한 조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재수단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은 관리자에 대해 최고 100만 유로 또는 기업의 전 세계 연매출액의 2%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의 처리 동향

EU의 2012년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삭제할 권리를 새롭게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에 엄격한 제한을 가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기업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유럽 및 미국 기업들과 미국정부가 개정안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EU 회원국들도 개정안 처리에 유보적인 반응을 취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를 도청하는 등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자행한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관계가 냉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EU의 개인정보보호제도들이 한층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³

유럽 국가들은 2013년 10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 의제로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상정해 논의하였다. EU는 당초 회원국 간에 이견이 표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 사안을 의제에서 제외했으나 유럽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한 미국의 불법 도청 사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EU 시민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이 추진력을 얻게 되었으며, 반대로 미국의 IT 기업들은 강화된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으로 인해 곤란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의회 시민자유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제3국 전송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을 승인하였다. EU는 또한 최근 미국 IT 기업의 주요 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U 당국은 안전하고 믿을 만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EU 당국은 애플과 구글 등이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버 자체가 미국에 있어 미국 정보기관이 손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⁴

최근 유럽의회는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공유를 중단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미국 정보당국이 국가 간 은행계좌 거래 정보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은행 간 통신망(SWIFT)을 감시해온 것에 대한 항의라 볼 수 있다. 이미 EU 집행위원회는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과의 은행계좌 정보 공유협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중단할 것임을 밝혔다. EU는 미국이 EU의 사생활 보호법규를 존중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거래와 항공승객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다. 국제은행 간 통신망 시스템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으로 인해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실행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도청사실이 알려진 후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 EU 간의 자유무역협정인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체결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틴 슈츠 유럽의회 의장도 미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 추락 등을 감안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신뢰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보보호 규정이 미국과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 범위 밖에 있는

문제라며 독일의 요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상에 개인정보에 관한 논의를 포함시킬 경우 오히려 유럽의 정보보호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⁵

구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EU의 수정권고

EU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구글에 대한 EU의 수정 권고를 들 수 있다. EU 규제당국은 2012년 구글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EU 정보보호지침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구글에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⁶ EU 규제당국은 구글이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글은 2012년 3월 지메일과 유튜브를 비롯한 자사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타깃 광고에 활용했다. EU 규제당국은 구글의 신규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개인정보 수집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검색정보 및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정보까지도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가 남용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EU 규제당국은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얻어 구글에 대해 수정권고를 하였고, 구글이 문제가 된 조항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허용하였다. 수정권고안에는 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대한 포괄적 기재 및 명시적 동의 절차 제시, ②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이용자의 통제권 강화, ③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⁷

이에 대해 구글은 자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이 EU의 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개정 목적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정보보호 방침에 있어 변동사항이 없고 이용자가 원할 경우 서비스 이용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구글은 미국에서도 이용자들의 검색 기록을 추적하였다는 혐의로 2,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다.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구글이 별도의 개선 조치를 제시하지 않아 스페인, 프랑스 등 6개국은 2013년 4월 구글이 자국의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⁸ 현재 EU 각국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에 대해 일정 액수를 벌금 상한으로 정하고 있으나, 2012년 개정안이 도입되면 구글은 전 세계 매출액의 2%까지 벌금으로 부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 강화 움직임이 주는 시사점

EU의 2012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은 현행 1995년 정보보호지침에 비해 구속력이 강화된 '규칙(Regulation)'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한 점,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일관된 수행을 위한 유럽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한 점, 벌금 상한을 높이는 등 실효성 확보수단을 강화한 점, 잊혀질 권리를 새로운 정보기본권으로 도입한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폭로되면서 개정안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 EU 역내의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함에 따라 EU 국가들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한국기업에도 개인정보보호규칙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EU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일정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조만간 한국 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입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

백대웅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⁵ "EC, 개인정보 문제는 자유무역협정 대상 아냐." (2013.11.5). 『파이낸셜뉴스』.
⁶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EU 구글 개인정보보호정책은 EU 기준 위반, 수정 권고 위반시 제재 경고." 『주간 인터넷 동향』.
⁷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시스템 (2013.4.12). "유럽 6개국 구글의 개인정보방침 논의."

⁴ "스노든 사태와 정보 주권." (2013.8.11). 『디지털타임스』.

³ "미-EU 관계 급랭, 개인정보보호법 급물살." (2013.10.25). 『연합뉴스』.



유럽 청년실업 문제의 해법, 도제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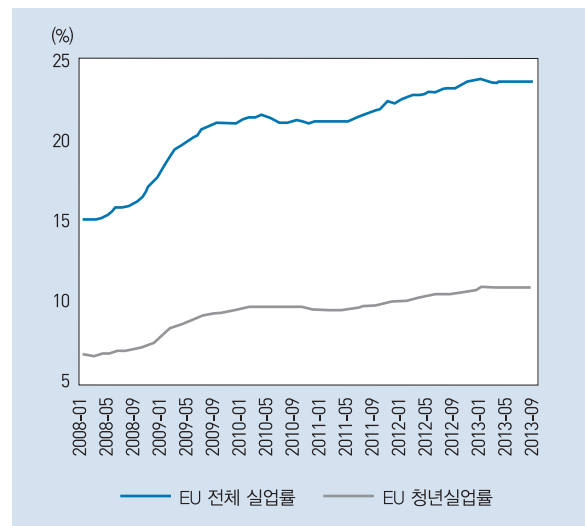
Solution to Youth Unemployment Problem in Europe: Apprenticeship

The prolonged recession in Europe has raised deep concerns over its unemployment rate. In the third quarter of 2013, unemployment rate in the EU and the Eurozone stood at 11% and 12.2% respectively, recording historically high rates. What is worse, youth unemployment rate floated at 23.5% and 24% respectively, doubling the total unemployment rate. This means that every 1 out of 4 young adults in Europe are unemployed. To elaborate further, Eurostat claims that there are approximately 7.5 million youths in the age group of 15~24 that have no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NEET). Closer inspection also reveals that youth unemployment differs significantly by countries. In the first half of 2013, Germany and Austria's youth unemployment rate stood at 9%, but in Greece, Spain, and Croatia, it floated around 50%. This had led the EU to search answers from the apprenticeship schemes of Germany, Austria and Switzerland. The European Council in June, 2013 announced that it would actively promote high quality apprenticeships and work-based learning, notably through the European Alliance for Apprenticeships.

깊어가는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유럽의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2013년 9월 EU 국가들의 평균 실업률은 11%(유로존은 12.2%)로 지난 수십 년간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전체 실업률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유럽 지도자들의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13년 9월 EU의 청년실업률은 23.5%(유로존은 24.1%)를 기록하며,

★ EU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추이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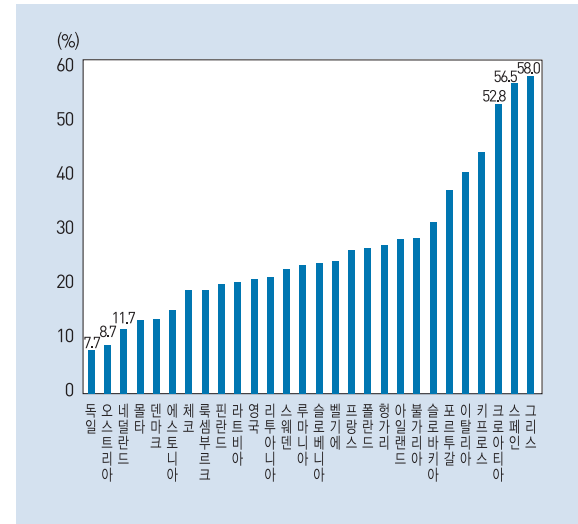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넘어섰다. 유럽의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유럽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EU 내 15~24세 청년들 가운데 직업이 없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니트족(NEET¹)은 무려 750만 명에 이른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실업 문제가 지역별로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어 가뜰이나 심각해진 EU 국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까지 낳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9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청년실업률은 9% 미만에 불과하지만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은 50%를 상회한다. 즉, 유럽의 중심 국가들과 주변부 특히 남유럽 국가 간의 경제력 차이가 청년실업률에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제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는 EU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미래가 보장된 곳이 아니라 위협받는 곳으로 생각하는 세대,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했고, 유럽인권평의회는 닐스 뮤즈니에크가 말한 것처럼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세대가 유럽통합을 냉소적으로 바라볼 것은 자명하며, 전 유럽이 청년실업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도 커질 것"이다.

¹ 니트족(NEET)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15~34세의 젊은 층을 지칭하는 말

★ 2013년 9월 EU 국가별 청년실업률 현황



주: 라트비아, 루마니아는 6월 기준, 그리스, 영국, 에스토니아, 헝가리는 8월 기준
자료: Eurostat

이미 오랜 실업에 허덕인 청년들은 2005년 11월에는 파리의 교외에서, 2008년 12월에는 그리스에서 대규모 소요를 일으킨 바 있다. 최근 2013년 11월에는 프랑스 서부지방에서 식료품 산업 노동자들이 EU가 각국의 고용시장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하며 극우 정치단체와 연합해 폭력 시위를 벌였다. 유럽 전체적으로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해 사회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며, 집권당에 대한 불신도 커지면서 각국의 정권 나야가 EU 집행부에 대한 지지도는 바닥을 헤아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 회원국들이 고공 상승하는 청년실업률을 잡지 못한다면 젊은 유권자들이 반EU적인 극우정당에 많은 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2014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프랑스의 국민전선(FN) 같은 극우당이 최다 득표를 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EU의 긴급 대책: 240억 유로의 기금 집행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너무 늦게 이 문제에 관심을 돌렸다. EU 집행위원회는 2011년 12월에야 '젊은이들에게 기회를'이라는 의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013년에 들어서야 EU 정상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지난 6월 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청년실업 대책기금을 80억 유로(약 11조 9천억 원)로 늘리고 앞으로 2년간 기금을 조기 집행하는 긴급 처방을 내렸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상황이 더 악화될 뿐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기금을 129억 유로(약 17조 원)로 대폭 확대했다. 동시에 유럽투자은행(EIB)과 유럽사회기금(ESF)도 이와 맞먹는 돈을 투입하기로 해 총 240억 유로(약 34조 원)가 넘는 돈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투입하게 될 전망이다. EU 정상회의 직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청년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4개월 이내에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처럼 기금의 대부분은 직업교육 부문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 등 청년실업률이 25% 이상인 지역에 주로 사용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자리를 찾기 쉬운 곳에서는 주로 노동력 재배치에 사용할 것이다. 같은 날 헤르만 판 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금부터 14개월 후 유로존의 모든 국가들이 고용시장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직업훈련 확충 등 기금 집행의 큰 틀은 명시되었으나, 각국에 위임된 구체적인 실행안은 아직 가시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11월 12일 후속 회담에서 "연말까지 청년실업 해소 계획안을 내놓는 국가에 우선적으로 EU의 자금을 즉각 제공한다."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공언이 있었을 뿐이다. EU 차원에서 큰 틀에는 합의했으나 개별 국가들 간의 의견 불일치를 극복하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사실 기금을 조성하는 것보다 더 큰 난관이 각국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유럽 지도자들이 청년실업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내놓지 못한 채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려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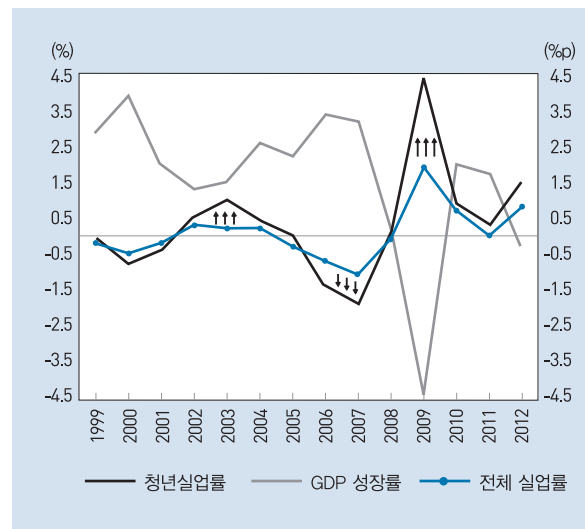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도 “EU는 ‘문제’가 아닌 ‘해결책’을 보여줘야 한다. EU가 실업문제를 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정책분열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실업의 주요 원인은 구조적 문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공통의 문제 원인과 개별적 원인을 선별하여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업의 원인은 크게 경기순환적(cyclical) 요인과 구조적(structural) 요인으로 대별된다.² 청년실업률은 다른 연령층의 실업률보다 경기순환적 요인에 훨씬 더 민감하다. 그 이유는 첫째,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규모가 경기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고, 둘째, 경기침체에 청년층이 주를 이루는 비정규직이 우선 해고 대상이 되기 때문이며, 셋째, 집단해고를 해야 할 경우 대체로 ‘후입선출(last in, first out)’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EU의 경우 GDP 성장률 등락에 청년실업률이 전체 실업률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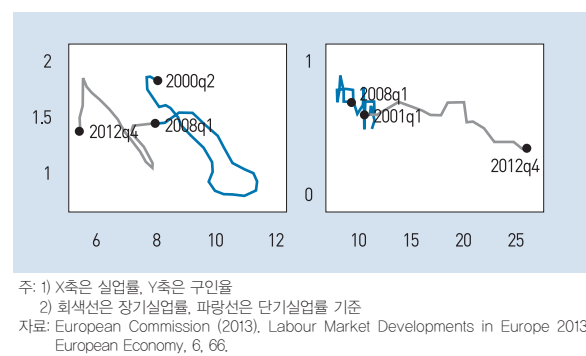
★ EU의 GDP 성장률과 실업을 추이(1999~2012년)



자료: Eurostat

그런데 최근 유럽의 청년실업률 상승 추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거의 6년 연속 지속되고 있어 경기순환적 요인을 넘어서 구조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단순히 노동시장의 위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20% 이상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어 최근 유럽의 경기침체와 같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의 구조적 원인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을 통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베버리지 곡선은 구인율과 실업률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다. 만약 구인율(job vacancy rate)이 일정한데, 즉 경기순환적 요인이 부재한데, 실업률이 계속 높아진다면, 이는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간에 미스매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에 일자리는 있으나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가진 인력이 없는 일종의 기술적 미스매칭(skill mismatch)이 그 주요 원인이다. 이는 실업률이 X축, 구인율이 Y축인 베버리지 그래프에서 좌표가 우측으로

★ 독일(좌)과 스페인(우)의 베버리지 곡선 비교



주: 1) X축은 실업률, Y축은 구인율
2) 회색선은 장기실업률, 파랑선은 단기실업률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Labour Market Developments in Europe 2013, European Economy, 6, 66.

² European Commission (2013), Labour Market Developments in Europe 2013, European Economy, 6, 36-37.

평행 이동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청년실업률이 낮은 독일은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청년실업률이 높은 스페인과 같은 남유럽 국가는 오른쪽으로 거의 평행 이동하고 있다. 구인율이 떨어지는 속도에 비해 실업률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남유럽의 청년실업률은 경기순환적 요소보다는 구조적 요소의 영향을 더 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2013년 EU 각료이사회 자료³에 따르면 EU 내에서 기술적 미스매칭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유럽 고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며 특히 지중해 연안, 즉 남유럽 국가들에게 이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럽, 특히 남유럽에 집중된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원인인 구조적 문제, 즉 기술적 미스매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청년실업의 해법은 직업교육 제도의 표준화

청년실업의 구조적 원인인 기술적 미스매칭은 무엇보다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구직자들의 학력 수준과 교육의 직업지향성 정도는 국가의 청년실업률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학력과 직업 지향적 교육 내용에 따른 유럽 국가 분류

높은 학력 수준, 높은 직업지향적 교육제도	평균 수준	낮은 학력 수준, 낮은 직업지향적 교육제도
네덜란드(7.6), 독일(10.8), 덴마크(9.8), 오스트리아(8.3)	벨기에(20.0), 아일랜드(15.4), 영국(15.3), 프랑스(21.1)	그리스(31.3), 스페인(30.0), 이탈리아(25.6), 포르투갈(22.0)

주: 괄호 안은 2000~2012년간 평균 청년실업률
자료: Eurostat; 강유택(2009), “유럽의 청년실업 문제와 시사점”, KIEP.

³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3),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s in Europe 2012 (Volume VIII/XI).

⁴ European Council (2013), Work-Based Learning in Europe.

위의 표에서 독일, 오스트리아처럼 학력 수준과 교육의 직업지향적 성격이 강할수록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25~64세 인구 중에서 고등교육 이상 수료자의 비중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80%를 훨씬 상회하는 데 비해 포르투갈(38%), 스페인(54%), 그리스(66%) 등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직업교육 이후 취업보장체제에서도 EU 각국의 차이가 크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모든 사람에게 6개월 이내에 인턴 자리를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졸업생이 일반 기업체에서 적합한 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노동시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턴십을 3년간 제공한다. 해마다 수익 유로의 국고가 소요되지만 기업체에서 인턴을 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1차 노동시장으로 흡수되는 비율이 50%를 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훨씬 많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이탈리아는 이러한 직업보장 제도가 없다. 직업교육 시간도 길고 실제 취업률도 낮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미용이나 목수 일을 배우는 수습생은 직접 가위나 대패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취업 확률도 매우 낮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교육 및 직업보장 제도의 국가별 편차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라마다 상이한 직업교육 시스템과 노동법을 표준화하고, EU 회원국 간에 전문 자격증을 서로 인정하고 인력 이동을 지원해주는 통일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도제제도가 직업교육 개선의 해법으로 부상

다행히도 직업교육 제도의 상향 표준화를 위해 EU 차원에서 이미 개선책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유럽이사회에서 ‘고품질의 도제 및 취업연계 학습(work-based learning) 제도가 유럽 도제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천명했다.⁴ 이는 청년실업률이 낮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3국에서 공통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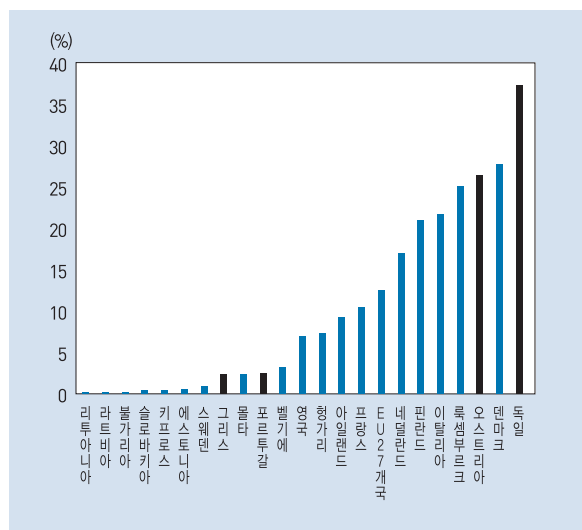




시행되고 있는 도제제도를 EU 전체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제제도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유럽 전체에 확산되어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점점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기반한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둘째, 신발, 종이, 가구 등 대규모 저숙련 노동력 중심의 산업이 급성장하고, 셋째, 노동조합의 등장으로 도제에 대한 노동착취가 문제가 되고, 넷째, 결정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공교육이 대세를 이루면서 도제제도가 밀려났다. 현재 도제제도는 형식적으로 유럽 전체에 잔존하고 있으나 실제 청소년의 직업교육에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곳은 독일을 비롯한 몇 개국에 불과하다. 15~19세 사이의 청소년이 도제제도에서 교육을 받는 비중은 독일 37%, 오스트리아 26%에 이르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2.4%와 2.5%에 그친다. 그야말로 도제제도는 사라져가는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왜 EU는 구시대 유물로의 회귀를 선택했을까?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제제도의 비중이 높은

★ EU의 국가별 청소년의 도제제도 참여율



주: 2006년 기준, 15~1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
 자료: McIntosh, S. (2007). *A Cost-Benefit Analysis of Apprenticeships and Other Vocational Qualific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heffield.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왜 튼튼한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고 청년실업률이 낮을까? 그 답은 바로 이들 국가가 낡은 도제제도를 현대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단점은 없애고 장점은 극대화했다. 먼저, 도제제도에도 계약에 의한 노동기준을 적용했다. 이로써 노동조합이 비판한 노동착취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둘째,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기술 교육이 표준화되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우선 산업구조의 변화 즉 기업의 변화하는 수요에 맞는 노동력을 양성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도 취업이 가능하여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도제제도가 기업과 정부와 노조의 공동합의와 공동지원에 의해 유지된다. 이로써 재계, 노동계, 정부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하면서 복지와 효율성이 동시에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노조가 나서서 범유럽 차원의 도제제도 활성화에 협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기업과 정부는 비용과 인력을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듯 현대화에 성공한 도제제도는 청년들에게는 취업률을 높여주고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적기에 제공하여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⁵ 실제로 2007년에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식 도제제도를 수료한 영국 노동자들의 취업률은 평균보다 15%, 임금은 23% 상승했다.⁷

현대적 도제제도의 핵심은 이중교육체제

많은 전문가들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제제도가 오늘날과 같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중교육체제(dual education system)라고

⁵ 36개국을 망라하는 유럽노조협회(ETUC)는 2013년 세계 수준의 유럽 VET(직업교육훈련) 제도 창설에 동의
⁶ Aivazova, N. (2013). *Role of Apprenticeships in Combating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13-20.
⁷ McIntosh, S. (2007). *A Cost-Benefit Analysis of Apprenticeships and Other Vocational Qualifications*, Department of Economics, University of Sheffield.

평가한다. 현재는 모든 선진국에서 직업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교육의 대부분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교육 내용도 프랑스는 철저한 이론 교육에, 미국은 실용교육에 치중하는 편이다. 그러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도제들은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학교에서 보내고 나머지는 기업 현장에서 보내면서 일반 과목과 실용과목 간의 학습 균형을 유지한다. 학교에서는 국가가 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일반 과목과 특정한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기업에서는 교육전문기업이 교육당국, 고용주, 노조와 공조하여 마련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그 결과 교양과 기술을 고루 갖추어 사회와 기업에 모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다.

결국 학생, 기업, 정부 모두 혜택을 받게 되는데, 먼저 학생들은 오랜 현장 경험 덕분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스펙을 쌓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10년 이중교육을 받은 학생의 59%가 취업에 성공했다.⁸ 또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학비를 면제받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일정한 임금까지 받는다.⁹ 정부는 재정적 사회적 부담을 더는 이점이 있다. 기업이 교육장소와 기자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임금까지 지급하여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고, 취업률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불안 요소가 감소하고 더불어 세수도 늘어나게 된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것은 바로 기업이다. 먼저 노동시장에서 구하기 힘든 해당 기업에 꼭 필요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외부 노동자를 고용할 때 필요한 구인 및 숙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도제 기간을 거친 노동자는 기업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이직률도 낮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과 공동체에서 기업의 이미지도 향상된다.

⁸ Steedman, H. (2010). *The State of Apprenticeships in 2010*.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⁹ 오스트리아는 블루칼라 노동자 평균 임금의 3분의 1, 독일은 한 주당 평균 230 유로를 지급

따라서 이중교육체제에 기반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도제제도의 성공을 EU 전체에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본도 이미 2004년부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일의 이중교육체제를 모방한 일본형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물론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독일식 도제제도가 유럽 전체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먼저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도제제도 확립에 필수적인 제도 개혁

1. 국가 공인 도제과정 수료증 제정
2. 국가 내 모든 업종을 포함하는 과정을 구축
3.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도제과정의 표준화, 검증 및 검증시험을 관할
4. 도제과정의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5. 노조가 도제에 대한 노동착취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6.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감세 등 재정적 인센티브 시행
7. 기업의 독자적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

자료: Aivazova, N. (2013). *Role of Apprenticeships in Combating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Brief, 13-20.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전망

이와 같이 도제제도를 중심으로 범유럽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초기 단계일 뿐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수는 없다. 과연 지금 당장 거리로 나섰은 유럽의 청년들이 얼마나 참아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유럽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을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유럽인들의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 곳은 바로 독일이다. 유럽 경제위기의 근원이 바로 이기적인





독일의 저임금 경쟁력에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낮은 임금으로 인해 국내 수요가 늘지 않자 독일은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시도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변국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임금에 의한 가격경쟁력으로 유럽 주변국들의 무역적자를 초래한 덕분에 독일이 나홀로 흑자 성장을 하고 있으며,¹⁰ 나아가 독일의 저임금으로 인해 주변국의 고용시장도 붕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성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장 지향적 경제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메르켈 독일 총리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주변국들의 돈을 독식하여 그 돈의 일부로 자선을 베풀겠다는 논리만만 들릴 것이다.

비난의 심각성을 느낀 독일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크다. 이에 중도좌파인 독일 사회민주당이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대연정을 전제조건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EU 차원에서도 대응이 시작되었는데, EU 집행위원회는 GDP 대비 6%가 넘는 과도한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감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듯 청년실업 문제를 포함한 EU의 경제위기는 현재로서는 매우 풀기 힘든 실타래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독일의 자금 지원과 독일식 도제제도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의 독주 구조를 극복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를 잘 대변한다. 그러나 이미 도제제도를 포함하여 범 EU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한국에서도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육성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일식 도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독일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산업 및 정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여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형의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독일식 도제제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체의 주도적 참여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의 현장실습에서 증명된 것처럼 기업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었다. 그러나 독일이 시대 변화에 맞게 도제제도를 현대화한 것처럼 한국도 한국 현실에 맞게 독일 도제제도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도 곧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EU 단일시장 20년의 성과 평가

The Single European Market 20 Years on Achievements, Unfulfilled Expectations and Further Potential

The Single Market is the core of Europe’s economic and integration architecture. Has the Single European Market fulfilled the expectations placed upon it? The answer is a cautious “yes”. Some expectations were probably unrealistically high. After a period of now more than 20 years the general consensus is that the Single Market has had substantial positive growth effects, which have, however, been less pronounced than predicted by the widely quoted Cecchini Report of 1988. Empirical analyses show that the Single Market has increased GDP in the EU by 2.1%. Exports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articular have received a major boost. The dismantling of trade barriers has created cost advantages, intensified competition in the Single Market and made companies more competitive in the global arena. The dismantling of barriers to intra-EU trade has also made the countries in the EU more attractive for investment by foreign firms. Given the structural problems in the Eurozone and Europe’s long-term dwindling importance in the global economy,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Single Market is one absolutely essential element. In some areas, national borders in Europe still constitute unnecessary obstacles. In the expanding sector for tradable services there is also still untapped growth potential.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to fix unnecessary regulations and the red tap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Single Market is of particular relevance for the current debate in the UK about the benefits of EU membership. Even though there are countries in the EU whose economies are more dependent on the Single Market, the UK does also benefit from being a member of a single European economic area.

1993년 1월 1일 공식 출범한 EU 단일시장(Single European Market)은 2013년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EU 단일시장은 출범 이후 확대를 거듭하여 회원국이 12개국에서 2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규모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해 단일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등장하는 등 지난 20년의 노력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도이체방크가 EU 단일시장 20년의 성과를 평가한 보고서를 발표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EU 단일시장 20년의 성과, 어긋난 기대와 성장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단일시장 출범 당시의 기대와 현재의 성과를 비교 평가한 것이다. 1980년대 말 본격적으로 단일시장 추진 작업이 시작되자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낙관적인 분석들이 쏟아져나왔다. 1988년 EU 집행위원회는 단일시장의 타당성을 주장한 체키니 보고서(Cecchini Report)를 발표했는데, 시장통합 후 6년간의 경제적 효과가 EU GDP의 4.5%에 이르고, 소비자물가는

6.3% 하락하며 180만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유럽의 기업들도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1988년 제조업 분야의 약 1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6%가 단일시장의 형성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며 54%는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답하여 단일시장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간에 걸친 EU의 단일시장 완성 노력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나, 체키니의 장밋빛 전망에는 못 미친다고 평가한다. EU 집행위원회의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단일시장의 경제적 효과는 1992~2008년 동안 EU GDP의 2.1%(2,330억 유로)에 불과했다. 한편으로는 EU 고용의 1.3%(277만 명) 창출되었으며 역내무역과 투자도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당초의 기대보다 성과가 아쉬운 것은 유럽의 경제구조에서 규모의 경제 효과가 큰 제조업 비중이 줄어들었고, 시장개방에 따른 조정비용이 약소기업들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며, 가격수렴 효과가 제한되는 등의 변수들이

¹⁰ 지난 8일 발표된 9월 독일의 무역수지 흑자는 188억 유로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변수들 외에도 단일시장의 성장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시장 내 서비스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들을 제거한다면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06년 서비스 시장의 자유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채택한 서비스 지침(Service Directive)의 경제적 효과가 첫 5년 동안 EU GDP의 0.8%였는데,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면 1.6%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OECD의 제품시장규제지표(Index of Product Market Regulation)와 전문서비스 규제지표(Index of Regulation of Professional Services)에서 각각 독일, 프랑스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가 낮은 순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규제완화 및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몇몇 EU 회원국들은 EU 단일시장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지난 20년간의 경제효과에 대해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내며 EU 탈퇴를 거론하고 나섰다. 영국 재무부는 여타 EU 회원국들의 역내 무역 규모는 평균 38% 증가한 반면, 영국은 7%만 증가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영국의 10대 무역상대국 중 7개국이 EU 회원국이며, 전체 무역의 50%가 EU 내에서 이뤄지고 있을 정도로 EU 내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으로 유입되는 FDI 가운데 절반 이상이 EU 회원국일 뿐만 아니라, 영국은 일본 등 주요 투자국들이 EU 단일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FDI 대상국이기도 하여 EU 탈퇴 시 통상투자 부분에서 발생할 막대한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 영국

기업혁신기술부(BIS)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이 완전히 자유화된 EU 단일시장에 잔류할 경우, GDP가 7% 추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유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영국 경제가 오히려 0.3%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EU 단일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어야 영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BIS의 예언은 여타 EU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한 경제동맹으로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지속될 경우, EU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역내 경제발전을 피하고자 했던 본래의 목표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등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공동경제지역(Common Economic Area)을 견고하게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자료: Deutsche Bank (2013.10.31.). The Single European Market 20 years on achievements, unfulfilled expectations and further potential.)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연세북극연구포럼 개최
Yonsei Arctic Forum

On October 2nd 2013, the Opening Ceremony of the Yonsei Arctic Forum was held at Yonsei University. Some 30 experts in the field of arctic, marine distribution and EU from institutions such as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and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participated in the forum. The keynote presentation of the forum was delivered by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s senior researcher Lee Dae Sik on the topic of 〈Opportunities and Obstacles for Arctic Development〉. Discussion by the experts, led by Yonsei University Professor Bae Jong Yun.

지난 10월 2일,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5층에서 연세북극 연구포럼 발족식이 거행되었다. 최근 북극항로의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EU와 동아시아 국가 간의 물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북극개발을 둘러싼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다. 발족식에는 박내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실장, 한승우 지구연구소 실장,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북극과 해양물류, EU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북극개발의 기회와 문제>라는 주제로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발제 이후, 지정 토론자인 배준용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시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학제 간 토론이 이어졌다.



온라인 원격 강의
Online Remote Lecture

On November 12th 2013, an online remote lecture took place in Yonhee Hall at Yonsei University. The lecture was organised in cooperation with Keio University's EU Centre and Yonsei-SERI EU Centre. Professor Jacques Pelkmans from the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 and College of Europe delivered a lecture on {Is the EU Stable? Deepening, Widening of Scope and Membership Revisited}. In the lecture, he discussed the membership of the European Union, its neighborhood policy and possibility of future development for the supranational organization.

지난 11월 12일, 연세대학교 연희관 404호에서 연세-SERI EU센터는 일본 게이오 대학교 EU센터의 협력으로 온라인 원격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유럽대학교 정책연구소의 자크 펠만 교수가 <유럽의 안정성: EU 통합의 확대와 심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강의에서는 EU와 EU 회원국의 정책, 앞으로 EU 가입이 예상되는 국가들에 관련한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다.





2013년 모의 유럽이사회 개최 Model European Council 2013

The Model European Council of 2013 was held on November 27th and 28th, at Yeungnam University. The Model European Council was organised by the 4 EU Centres of Korea, with Yeungnam University taking lead. The event saw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y students from Korea with an interest in the European Union, who share their ideas and opinions on the topic of <EU Development Policy: Increasing Impact of EU Development Policy on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for Human Development in Asia>.

지난 11월 27~28일에 걸쳐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모의 유럽이사회가 개최되었다. 2013년 모의 유럽이사회는 영남대학교 EU센터 주도하에 국내 4개 EU센터가 협력한 행사이다. 이 행사에서는 유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 가운데 선발된 32명이 참가하였으며, <EU의 발전정책: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성장>를 주제로 열띤 학문적 토론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류하였다.



국제 에너지 컨퍼런스 개최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On November 28th 2013, the International Energy Conference on <Energy Supply Options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Lessons from Germany> was held at Conrad Hotel, Seoul. The conference was organized in cooperation with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Global Energy Cooperation Centre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onrad Adenauer Stiftung in Korea, and the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The topics discussed at the conference were as follow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of a sustainable energy supply in a united Germany, natural gas supply options for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and the DMZ oil storage initiative for international collaboration and peace.

지난 11월 28일,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통일 한국의 에너지 수급정책: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옥스퍼드 에너지 연구소,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 협력센터,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의 협력 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정책과 협력에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로는 첫 번째 세션에서 논의된 통일독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과 통일한국의 에너지 수급 전략 방안, 두 번째 세션에서 논의한 통일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방안, 세 번째 세션의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내 공동저장시설 개발 구상이 있었다.

